

金正日 政權의 向方

제18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5. 11. 8.

民族統一研究院

- 目 次 -

開 會 辭	李秉龍 1
I. 主 題 發 表	3
1. 김정일 정권의 변화전망	金聖哲 5
2. 북한의 경제정책 전망	吳承烈 45
II. 綜 合 討 論	89
會 議 日 程	125

開 會 辭

오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金正日 政權의 向方”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바쁘신 중에도 사회자 및 토론자로 참석하여 주신 학자,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公私多忙하신 중에서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어주신 來賓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파급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다하던 金日成이 死亡한 이후 북한체제는 현재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각한 경제난, 외교적 고립, 그리고 주민들의 사상동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금후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북한정치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黨創建 50周年 기념일을 맞이하였어도 당창건 公式 記念式을 거행하지 못했음은 물론 체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黨의 새로운 정책노선을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 사망 이후 1년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식적인 최고 지도자가 없는 非正常的인 상태를 지속하면서 김일성 遺訓統治와 思想教養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金正日이 지난 20년 동안 후계준비를 해왔다고 하지만 김일성 통치 50여 년 동안 지속해왔던 폐쇄주의, 개인숭배 등의 非정상적인 통치양식과 경제난, 부정부패 등의 온갖 矛盾들을 물려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안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내외적 改革·開放이 불가피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현재 變化보다는 冷戰體制의 고착과 현상유지를 통해서 작금의 체제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冷戰的 現狀維持에 집착해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도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人道的 目的에서 쌀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운반 선박에 인공기를 게양하기도 하고 船員을 억류하는 등의 사건을 조성하여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梗塞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장간첩을 남파하여 남한사회를 교란하는 등의 도발행위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련한 이 학술회의는 이러한 北韓의 狀況이 금후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북한의 政策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展望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회의가 우리의 對北 및 統一政策 입안과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討論의 場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사계의 전문가 여러분께서 자유롭고 진지하게 고견을 나누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開會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 11. 8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秉龍

I. 主題發表

- 司會: 安秉俊(연세대학교 교수)
- 發表: 金聖哲(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정일 정권의 변화전망”
吳承烈(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북한의 경제정책 전망”

빈 면

김정일 정권의 변화전망

金聖哲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 목 차 >

- I. 서론
- II. 북한체계의 변화에 대한 개념적 이해
- III. 북한체계의 구조적 문제 (1): 하위체계의 이원화
- IV. 북한체계의 구조적 문제 (2): 하위체계간 모순
- V. 김정일 정권의 과도적 권위구조
- VI. 결론: 변화 시나리오

I. 서론

현재 북한이 김정일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문을 품을 만한 경험적인 증거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사망한지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은 공식 승계의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음으로써 김정일 정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둘로 나누어지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지속된 경제난, 식량부족 그리고 최근의 수

재 등으로 김정일의 공식 승계와 상관없이 머지 않아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다른 분석가들은 20여 년에 걸친 권력승계 준비작업으로 김정일의 권력기반이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있으며 체제에도 커다란 이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같은 전망들은 충분한 자료와 논거에 바탕을 둔 예측이라기 보다는 지금까지 북한이 걸어온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豫見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기본적으로 북한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부족에서 비롯되지만, 붕괴나 안정에 대한 개념적 모호성 혹은 논리성의 결여에 의해서도 초래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유의하여 김정일 정권과 북한의 미래를 보다 체계적으로 전망하고자 한다. 달리 말해, 본 논문은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構造的 矛盾 중 취약한 고리가 어떤 부분이며 그것이 權力承繼 과정에서 김정일 정권 혹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전망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한 개념적 이해

1. 변화의 세 가지 차원

일반적인 정치변동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고 있는 崩壞라는 용어는 분석적인 차원에서 비롯된 개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같은 용어가 북한의 변화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에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우선 이 용어는 무너지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가, 즉 붕괴의 영역 또는 실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붕괴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정권 차원의 변화에 그치는 것인지 혹은 체제변동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라는 체계 전체의 소멸을 뜻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다. 이같은 모호성으로 인해 붕괴란 용어를 사용할 경우 그것은 급격한 변동이라는 것 이외에 아무런 의미를 전달해 주지 못하게 된다.

북한의 변화를 올바르게 전망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의 수준에서 살펴보면, 변화는 政權 혹은 權威當局者(political authorities), 體制(regime), 그리고 體系(system)의 세 가지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다.¹⁾

첫째, 政權交替는 일상 정치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권이란 권위당국자(혹은 권력 엘리트)들이 일정한 원칙을 바탕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집단을 말한다. 정권차원의 변화는 민주적 체계에서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비민주적 체계에서는 흔히 집단간의 투쟁과 갈등을 거쳐 발생하게 된다. 한편 전통적인 체계에서는 관습 또는 세습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둘째, 사회과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대상인 體制的變化는 정권

1) David Easton, "Systems Analysis and Its Classical Critics,"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3 (Fall 1973), pp. 295~300.

의 교체뿐만 아니라 정치적 행위자가 지향하는 가치 및 규범 그리고 권위구조의 변화까지를 동반한다. 하나의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형성되면, 그 구성원들은 종전과 전혀 다른 사회적 행동양식을 가지게 된다. 이같은 체제변동은 흔히 프랑스혁명과 같은 古典的 革命이나 1980년대 말의 동구 社會主義 大變革과 같은 혁명적 사건에 의해 일어난다. 하지만 혁명적 변화를 겪지 않고도 체제변혁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정권차원의 변화가 체제변혁으로 이어지는 繼起的 변화가 그것으로서, 전후 제3세계의 취약한 민주주의체제가 군부 쿠데타에 의해 정권교체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체제전환으로 이어지는 경우에서 그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셋째, 體系의 變化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더 이상 기존의 정치적 분열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새로운 체제의 형성 또는 기존 체제의 분열에 의해 그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새로운 체제와 정권하에 속하게 되는 경우이다. 전후 신생국의 독립, 남북한의 분단, 구소련의 해체, 동독의 서독에의 흡수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체제의 변화는 앞의 두 가지 수준의 변화보다 포괄적(inclusive)이므로 정권변화는 물론 체제변화를 동시에 수반하게 된다.

세 가지 차원의 변화에 대한 이해는 특히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개념적 혼돈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이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 우리는 붕괴라는 용어가 동구에 있어서는 체제변화를 의미하며, 구소련에서는 체제변화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연방이란 기존 체계의 해체를 뜻하게 됨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북한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도 우선 이론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수준의 변화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는 金正日 政權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김정일과 그를 둘러싼 권력 엘리트의 교체이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유훈관철'이란 이름 아래 김일성의 정치적 유산을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상황에서는 의미있는 변화일 것이다. 둘째는 노동당에 의해 지배되고 주체사상에 의해 합리화되는 '우리식 사회주의' 體制가 변화를 겪게 되는 경우이다. 이 변화는 시간적으로 급격한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 동시에 내용에 있어서 심각한 구조적인 모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셋째는 북한이라는 體系 自體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실상 통일이라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변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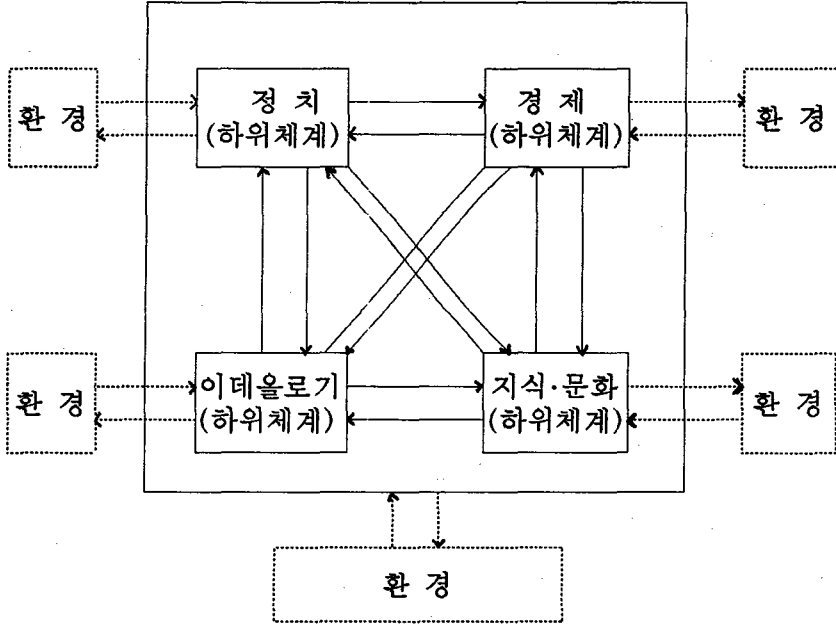
2. 변화 분석을 위한 개념들

가. 체계의 네 가지 영역

그러면 이상과 같은 변화를 가져오는 動因 또는 요인은 무엇인가? 김정일 정권, '우리식 사회주의,' 전체로서의 북한체계의 변혁을 가져올 동인은 무엇인가? 세 가지 수준의 변혁에 상응하는 각각의 동인이 별도로 존재하거나 설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규명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느 수준의 변화이든지 그것의 동인은 단순히 정치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김일성 사망 후의 김정일 정권과 관련하여, 권력승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정치적 불안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권의 안정성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이같은 정치적 측면 외에도 경제적 침체 혹은 제2경제의 확산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곧 세 가지 차원의 변화 중 가장 낮은 것인 정권변화에 대한 분석도 정치영역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 내의 변화와 그것들 사이의 관계구조 속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북한체계의 영역을 4개의 下位體系로 나누고, 전체체계 또는 각 하위체계가 외부의 環境과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를 다음 그림과 같이 설정한다.

<그림> 체계의 구성요소, 환경 그리고 상호작용2)



사회주의체계에서 각 하위체계는 특정한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영역과 관련된 행위의 집합을 말한다. 각 하위체계에서 영향력있는 행위자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모든 주민들은 전체적인 체계의 구성원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이에 관여되어 있

2) 본 그림은 전체로서의 체계인 생산양식(또는 사회구성체)에 관한 폴란차스(Nicos Poulantzas)의 분석을 이스턴(David Easton)이 도식화한 것에서 필자가 아이디어를 얻어 사회주의체계의 분석에 맞도록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David Easton, *The Analysis of Political Structure* (New York: Routledge, 1990), p. 174 참조.

다. 여기서는 먼저 각 하위체계의 意味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政治的 下位體系(이하 정치체계)는 유형 및 무형의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행위의 집합이다. 나라마다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다양한 공적 메카니즘을 통해서 최고 엘리트의 정책과 노선이 전달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체계는 다른 유형의 체계보다도 훨씬 정치화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같은 공적 메카니즘을 대표하는 것은 당, 정, 군의 官僚機構이다. 사회주의체계는 관료기구를 사회조직의 유일한 신경조직으로 간주하고 다른 어떠한 대안적 정치조직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일조직체적(mono-organizational) 성격³⁾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김일성 유일지도체제는 전반적인 권위구조가 개인에게 의존한 독특한 형태의 단일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체계에서는 權力承繼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그 과정에서 흔히 단일조직체적 성격이 완화되어 집단간 갈등을 빚게 된다.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권력 엘리트의 조합과 후계자 정권의 성격은 체계의 일부 또는 전반적인 속성에 변화를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치체계내 권력 엘리트의 변화는 곧 체계의 전반적인 통합과 사회적 자원의 배분 방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권력승계와

3) T. H. Rigby, "Introduction: Political Legitimacy, Weber and Communist Mono-organizational Systems," in T. H. Rigby and Ferenc Fehér, eds., *Political Legitimation in Communist State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2).

후계자의 정권창출 형태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며, 현재 북한 김정일 정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둘째, 理想的 下位體系(이하 이념체계 또는 이데올로기체계)는 타 사회주의체제에서 통상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말하지만, 북한의 경우 이른바 그것의 창조적 적용인 主體思想이다. 어떤 형태의 이데올로기체계이든 그것은 여러 가지 제도화된 채널을 통해 전체로서의 체제를 正當化하기 위해 운용된다. 즉, 당의 선전선동 부를 비롯한 관료기구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각종 학습과 생활총화 등의 제도를 통해 최고 엘리트의 우상화 또는 당적 지배를 상징적으로 합리화하는 위로부터의 정당화(top-down-legitimation)가 이루어진다. 이 체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엘리트는 사상 분야 담당일군들이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주어진 이념을 어느 정도 內面化하느냐에 따라 이념체계의 안정성이 좌우되는 바 이들도 중요한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주의체제에서 經濟的 下位體系(이하 경제체계)는 중앙집중식이라는 면에서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같은 사회주의경제의 기본원리는 비효율성을 낳았고 제2경제의 확산을 가져왔으며 따라서 사회주의 대변혁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소련 및 동구와 지금의 중국은 경제체계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개혁·개방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같은 경제정책의 변화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즉 1) 권위구조 및 이념체계의 수정, 2) 소유권의 조정, 3) 경제에 대한 관료적 통제의 완화⁴⁾라는 構造的 先在要件⁵⁾을 기본적

으로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사회주의체계의 본질적 속성은 손상되기에 이른다. 또한 생필품의 고질적 부족으로 인한 암시장과 같은 제2경제, 즉 통제의 영역을 벗어난 비공식적 경제의 팽창도 사회주의 경제체계의 속성을 변질시킨다. 아무튼 주목할 것은 경제침체의 극복을 위한 개혁·개방의 수행과 제2경제의 확산 과정에서 관료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경제체계의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게 된다는 점이다. 북한은 정치적 안정을 위해 이상과 같은 구조적 선행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나진·선봉에 대한 국지적 개방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만큼 경제적 실효성은 줄어들 것이다.

넷째, 知識 및 文化的 下位體系(이하 지식·문화체계)는 사회주의 계급정책의 가장 민감한 대상인 작가, 예술가, 교수, 연구원, 기술자, 의사, 사무원 등의 지식인이 주된 역할을 행하는 영역이다. 대부분의 사회주의체계들은 기본적으로 레닌의 계급이론을 따라 노동자와 농민이 계급의 기본을 이루는 것으로 규정하며, 두 계급 이외에 정신노동 분야의 지식인을 類似階級으로 설정한다. 또한 사회주의체계가 기본적으로 비노동 수입을 부정하는 만큼 지식인은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존재하게 된다.⁶⁾ 그런데 지식

-
- 4) 심도의 순서는 1), 2), 3)이 되며, 심도의 순위가 높은 것은 낮은 것에 영향을 미친다.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360~5 참조.
 - 5) 이 개념에 대해서는 이용필, 「정치현상의 체계적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pp. 71~3 참조.
 - 6) 조한범, 「러시아 사회구조의 변화와 사기업가 형성의 경향성」, 「현대 산업사회 연구」, 1권 1호 (1995 봄), p. 98.

인의 사회적 지위는 지식인의 전통, 계급정책, 국제적인 영향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도 한다. 중유럽의 폴란드, 헝가리, 체코의 지식인들은 사회주의건설 이전의 역사적 전통과 1975년의 헬싱키 선언과 같은 국제적인 사건에 힘입어 공유된 가치를 형성하면서 정치체계의 영향력을 벗어나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영역을 구축하였다. 반면에 북한의 경우, 분단관리체계라는 특성 때문에 남로당계 중심의 지식인들은 숙청에 의해 큰 시련을 겪게 되고, 더욱이 '인테리의 혁명화·노동계급화' 정책에 의해 유사계급으로서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나. 구조적 동인과 권력승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체계가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세 가지의 속성, 즉 1) 하위체계 내의 비공식 부분의 잠재, 2) 체계내 하위체계간의 상호관계, 3)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때로는 변화의 構造的 動因, 즉 체계의 부분적 혹은 전반적 변화 요인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세 가지의 속성이 변화를 구조적으로 요구하는 요인으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각 하위체계에 잠재해 있는 비공식 부분이 표면화되어 二重性이 심화되는 경우 변화의 동인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체적 체계(전체로서의 체계)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가 浸透되지 못하는 제2의 영역이 각 하위체계 내에서 확산되어 체계의 전반적

속성이 훼손되기에 이른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대변혁 이전 동구에서 제2경제 또는 암시장의 심화는 중앙집중식 경제체계를 잠식하였고, 공식 이데올로기에 대한 내면화 수준의 저하와 이에 따른 의식의 이중성은 주민들의 체계에 대한 정체성 상실을 의미하였으며, 사미즈다트를 통한 창작활동과 서구적 록 음악의 확산은 지식·문화체계의 이중성을 가속화하였다. 이원화의 심화는 크게는 정치체제 그리고 작게는 권력 엘리트가 통제할 수 없는 私的 領域의 확대와 체제 전체의 결속을 저해하는 원심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사회주의체계의 본질적 속성을 손상시키는 동인이 되었다. 최근들어 북한에서도 이같은 이원화 현상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둘째, 체제 내적인 상호관계, 즉 下位體系들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葛藤 혹은 모순은 변화의 구조적 동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회주의체계의 제도화기는 종전 체제의 모순들을 극복하고 정치, 경제, 이념, 지식·문화의 측면에서 一致性(congruence)을 추구하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나 스탈린주의의 기치 아래 공산당에 의해 주도되는 농업집단화, 중공업 발전전략, 무상교육정책 등은 모두 이같은 일치화 작업들이다. 그러나 체제 내적인 역동성 또는 환경과의 관계에 의해 하위체계들은 갈등구조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후르시초프 집권기 도시에서의 대규모적인 아파트 건설정책을 수행한 결과로 많은 도시의 주민들이 사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주의적 집단주의 의식의 약화를 가져왔다.⁷⁾ 이것은 곧 경제건설의 결과로 타 영역에서의 사회주의적 속성과 배치되는 개인주의적 의식이 성

장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모순의 표출은 곧 체계 내적 일치성의 결여를 의미하며 안정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⁸⁾

하위체계간 구조적 갈등은 현재의 북한에서도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일성 사후에도 그의 카리스마를 김정일에게 전이시키기 위해 다양한 상징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후계자인 김정일이 조작된 카리스마에 상응하는 경제적 업적을 이룩하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물질적 보상을 주지 못하는 경우, 이는 이념체계와 경제체계간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켜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전체 체계와 환경간의 관계 혹은 각 하위체계와 환경간의 상호작용은 권력 엘리트의 의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도를 벗어난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후자의 경우 전체로서의 사회주의체계 또는 각 하위체계가 심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만드는 구조적 동인을 제공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체계와 환경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連結效果(coupling effect)이다.⁹⁾ 빈번하고 심도있는 상호작용은 체계간의 독립성의

7) Leszek Kolakowski, "Admist among Ruins," *Daedalus*, vol. 121, no. 2 (Spring 1992), p. 46.

8) 일치성(congruence)과 안정성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는 Harry Eckstein, *Division and Cohesion in Democracy: A Study of Norwa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6), pp. 234~53 참조.

9)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대해서는 Robert B. Glassman, "Persistence and Loose Coupling in Living Systems," *Behavioral Science*, vol. 18 (1973), pp. 83~98; Herbert A. Simon, *The Science of the Artificial* (Cambridge, MA: MIT Press, 1981), pp. 200~2; Easton, *The Analysis of Political Structure*, p. 248 참조.

수준을 저하시키고 한 체제에서의 동요가 다른 체제로 전이되는 조건을 용이하게 만들어 준다.

사실 소련 및 동구의 연쇄적인 변혁은 체제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속도와 심도의 수준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그러나 북한은 이런 측면에서는 매우 높은 안정성을 유지해 왔다.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4가지 자주성 원칙에 근간을 둔 특유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사회주의 대변혁을 계기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발전시켰다. 더욱이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를 설치하여 개방을 시도하고 있으나 경계선을 설치하여 국지적 개방에 국한시킴으로써 외부와의 단절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효과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¹¹⁾

이상과 같은 세 가지 구조적 동인은 특히 權力承繼時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왜냐하면 체제는 최고 엘리트

10) 체제와 환경간의 상호작용이 점진적이고 완만한 변화를 수반하는 사례도 있다. 동구의 지식·문화체제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예로서, 1975년의 헬싱키 선언을 계기로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지식인들이 서구의 지식인들과 교류를 갖게 되면서 시민사회 형성 또는 부활의 주역이 되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Vladimir Tismaneanu, *Reinventing Politics: Eastern Europe from Stalin to Havel* (New York: Free Press, 1992), pp. 117~8.

11) 사회주의 대변혁 이후 북한이 대외적인 관계, 특히 대미 및 대일관계 진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증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북한도 완전한 의미에서의 폐쇄체계(closed system)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작용이 북한체제내 각 영역에 가시적인 연결효과로 나타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의 유고에 의해 구조적 모순들의 표출을 억제하기에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권력승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엘리트들 사이에 최고 직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권위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집단들의 이익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며¹²⁾ 그만큼 체계의 구조적 갈등 또한 가시화될 개연성이 증대할 것이다.

따라서 승계과정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軍部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게 된다. 군부의 개입 정도는 체계 내외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군부의 개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 군부가 직접 권력을 장악하고 체계의 변혁을 시도하는 통치자(ruler) 역할을 행하는 경우이다. 둘째,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지만 관료부패의 척결과 같은 한정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후견인(guardian)으로서의 역할을 행하는 경우이다. 셋째,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지는 않고 정책 결정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일정한 후계자의 권력 승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조정자(moderator) 역할을 행하는 경우이다.¹³⁾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느 경우이든지 군부의 개입이 당에 의한 군부의 지배라는 당·군관계의 일반원칙에서 벗어난 권위구조를

12) Myron Rush, "The Problems in Communist Regime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32, no. 1 (Spring-Summer 1978), pp. 169~70.

13) Eric A. Nordlinger, *Soldiers in Politics: Military Coups and Government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7), pp. 21~7.

놓는다는 점이다. 또한 군부의 개입은 구조적 모순 중 가장 취약한 고리와 연결되어 발생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우,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특히 下位體系의 二重性과 下位體系間의 矛盾으로 인해 체계의 부분적 혹은 전반적인 안정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최근 나타나는 현상인 군부의 지위 향상은 단순한 사기진작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김정일이 공식승계를 늦추면서 최고사령관 혹은 국방위원장의 직책으로서 권위를 행사하는 이유는 그가 구조적으로 군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구조적 동인과 권력승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관계가 김정일 정권과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향방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Ⅲ. 북한체계의 구조적 문제 (1): 하위체계의 이원화

제2절에서 이미 개념적으로 논의한 바와 같이, 가장 낮은 차원인 김정일 정권의 정착 또는 변화조차도 정치적인 요인은 물론 그 이외의 다양한 요인에 크게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제3절과 제4절에서는 김일성이 물려준 유산이자 김정일이 해결해야 할 북한체계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고, 이것들이 김정일 정권 또는 체계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보기로 하자.

1. 관료일탈행위와 정치적 권위의 잠식

관료일탈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며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체제의 존속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권력 엘리트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끈다. 특히 관료기구가 극도로 팽창되어 있는 사회주의체제에서는 관료일탈이 관료 개개인에 그치지 않고 일반 주민에게까지 당의 통제를 비껴간 삶의 영역을 허용해 주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관료일탈은 흔히 관료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관료와 일반 주민들간 호혜를 위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관료의 일탈행위는 이른바 '기관이기주의'처럼 조직의 이익을 위해 저질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경제가 침체를 겪게 되고 생필품 부족현상이 지속되자 점차 個人利益을 위한 經濟的인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¹⁴⁾ 북한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관료일탈행위가 양적으로 급증하고 질적으로 심화되자 이를 反社會主義的인 것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비사회주의 타파 그루뵀'¹⁵⁾을 구성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최근 김정일은 관료들의 부정·부패의 확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김일성

14) 북한 관료들의 일탈행위 내용과 유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로는 필자의 「북한 관료부패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15) 이것은 1991년 10월 중앙인민위원회가 공포한 「각기관, 기업소, 군, 가정에서 비사회주의를 뿌리뽑을데 대하여」라는 정령에 의해 사회안전부, 국가안전보위부, 기관·기업소의 모범자로 구성되었다.

사후 발표한 세 개의 논문¹⁶⁾에서 줄곧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에 대한 경고를 빠뜨리지 않았던 점에서 잘 드러난다.

물론 관료일탈이 관료와 일반 주민의 유리현상을 다소 완화시켜 주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정치체계의 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다.¹⁷⁾ 북한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간혹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국가안전보위부나 사회안전부 요원과 주민간의 관계가 이완되어 후자가 전자에게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¹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그리고 장기적 측면에서 관료일탈행위가 정치적 권위를 손상시킨다는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첫째, 관료일탈은 사회에 대한 官僚機構에 의한 統制力 상실을 가져온다. 위에서 언급된 바 있는 관료와 주민간의 유리현상 완화는 다름 아니라 국가안전보위부나 사회안전부 요원들의 주민통제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 기관원들의 통제권이 주민들로부터 저항을 받는 사태로 발전하고 있다.

16) 세 개의 논문이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1994.11.1);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1995.6.19);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1995.10.2) 등을 말한다.

17) J. S. Nye,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A Cost-Benefit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1, no. 2 (June 1967), p. 420; Leslie Holmes, *The End of Communist Power: Anti-Corruption Campaigns and Legitimation Crisis* (Cambridge: Polity Press, 1993), p. 204.

18) 김정민(전 북한 대양무역 사장)과의 면담, 1994.2.17, 1995.5.17; 고청송(전 북한 자강도 강계 혁명사적지 보존사업소 지도원)과의 면담, 1994.3.25.

19) 이같은 사태는 산발적으로 발생하지만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관료의 일탈행위는 흔히 주민과 관료 사이의 호혜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관계에 참여할 수 없는 주민들로 하여금 심한 相對的 剝奪感을 느끼게 한다. 예컨대, 주민이 관료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생활편의와 관련된 혜택을 받는 사례가 흔히 있는데, 이는 외국의 친척을 통해 외화나 외국제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거나 해외근로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렇지 못한 일반 주민들은 상대적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사회주의체계가 표방하는 '제급없는 사회'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된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뇌물수수란 '끼리끼리' 이루어진다는 불평이 주민들 사이에서 표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셋째, 관료일탈은 사회주의에 대한 주민들의 信賴를 상실케 한다.²⁰⁾ 북한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 또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19) 최근 러시아 동방학연구소의 한 보고서는 사회안전부 요원들이 업무 집행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심지어는 살해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 「朝鮮日報」, 1994.7.18에서 인용.

20) 관료일탈과 관련, 주민들의 대중적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타 사회주의 체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베트남의 정치국원이었던 레 독 토(Le Duc Tho)가 주요 신문인 「난단」(Nhan Dan) 1986년 5월에 기고했던 다음과 같은 글을 참고해 보자. "우리에게 닥친 도전은 물질적 유혹, 부르조아 스타일, 돈, 예쁜 여자 그리고 소비재 등이다. ... 이러한 도전은 혁명가의 자질과 윤리를 점차 흔들리게 하고 있다. 그것은 암암리에 우리의 힘을 파괴시키고 있다. ...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관료들과 당원들 사이에 수습하기 어려운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으로는 부패, 뇌물수수, 밀수, 축재, 타락한 생활,

식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일탈행위를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계층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구호에 대해 쉽게 동의하기 힘들 것이다. 다시 말해, 관료들이 이상과 같은 구호와 모순된 삶을 보일 때, 주민들은 정치적 권위와 정당성을 의문시할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관료일탈에 따른 부작용이 주민들의 집단적 정치 행동으로 표출되었다는 자료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1989년 中國의 천안문사태시 관료의 부정·부패가 대학생들의 중요한 불만 대상들 중의 하나였다는 사실을 보더라도,²¹⁾ 돌발적인 사태시 북한 주민들의 관료부패에 대한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

2. 제2경제의 확산

중앙집중식 경제체제에서는 유통기제의 미비와 생필품의 고질적 부족으로 제2경제, 특히 그것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暗市場이 존재한다. 제2경제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가지는 의미는 실로 심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경제작동의 기본원리에서 벗어난 비공식적 경제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암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제2경제의 발달은 경제의 실질적인 분산

선물을 통한 공공연한 수뢰 등이 있다. ... 이런 현상은 어느 곳, 어느 계층에서나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생산과 인민의 생활에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며 관료와 당을 타락시키고 인민의 신뢰를 상실케 한다." Holmes, *The End of Communist Power*, p. 6에서 재인용.

21) Yan Sun, "The Chinese Protests of 1989: The Issues of Corruption," *Asian Survey*, vol. 31, no. 8 (August 1991), pp. 776~81.

화(*de facto decentralization*) 현상을 낳는다고 할 수 있다.²²⁾

북한은 식량난과 전반적 경제침체 이외에도 제2경제의 발달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암시장은 농민들이 텃밭 생산물을 교환하는 農民市場을 무대로 확산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일부 경제관료들이 여기에 개입한다는 점이다. 즉, 계획경제의 틀에서 벗어나 불법으로 생산된 공산품을 농민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농민시장의 원래 기능을 왜곡시켜 왔다는 점이다. 소비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암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은 대부분 국정가격의 10배를 훨씬 능가하여 그들에게 많은 이윤을 남겨준다. 결국, 농민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암시장은 관료일탈과 상승작용을 하면서 계획경제가 미치지 못하는 이원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농민시장을 중심으로 한 암시장이 주민들의 情報交流의 場으로 기능함으로써 당의 정보 통제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농민시장의 이러한 기능은 그것이 지니는 다음과 같은 특성 때문에 나타난다. 우선 농민시장은 이질적인 집단에 소속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서 자신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크게 책임져야 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스럽게 자신이 경험한 세계와 인지한 사항을 담론할 수 있게 된다.²³⁾ 따

22) Gregory Grossman, "The 'Second Economy' of the USSR," *Problems of Communism*, vol. 26 (September-October 1977), p. 40; Barbara N. Sands, "Decentralizing an Economy: The Role of Bureaucratic Corruption in China's Economic Reforms," *Public Choice*, vol. 65, no. 1 (1990), pp. 85-91.

23) 북한과 같이 통제된 사회에서는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단체별 혹은 집단별로 교양받고 총화하기 때문에 사생활의 노출 정도가 매우 높다. 따

라서 신의주, 강계 등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과 평양, 청진 등 대도시의 농민시장에서는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거래를 하는 것 이외에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중요한 일상생활의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中國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개혁·개방에 관한 소식을 전해듣고 南韓에 관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있다.²⁴⁾ 이렇게 제2경제는 경제체계를 이원화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공식 매스컴에 의해 차단된 情報의 流通을 확대시켜 주고 있다.

이상 제2경제 확산에 따른 經濟體系의 二元化는 경제침체와 식량난 등의 문제와 함께 북한체계의 안정을 저해하는 구조적 동인이 되고 있다. 중요한 문제점들로는 첫째로 경제의 이원화가 최근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 둘째로 관료들의 일탈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점, 셋째로 외부 환경과의 연결효과 증대로 점차 정보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라서 같은 집단 또는 인접집단에 소속된 사람에게는 언행을 주의해야 한다. 반면에 이질적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대체로 그러할 필요가 없으며, 이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럽게 다양한 정보가 교환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민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군대와 같은 규율이 엄한 집단 내에서도 발견된다. 소속을 달리하는 군관들이 집단으로 교육을 받는 장소는 그들이 자신의 부대에서 취득한 정보를 교류하는 곳이 되며, 따라서 새로운 정보에 대해 '귀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김정민과의 면담, 1994.2.17, 1994.3.10, 1995.5.17; 김남준(전 북한 인민군 경비소대장)과의 면담, 1994.3.16.

- 24) 198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을 방문한 사람들을 통해 들어온 남한가요 테이프와 무역회사 직원들을 통해 밀반입된 남한 제품이 암시장에서 유통됨에 따라 남한경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또한 농민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들 중에는 라디오가 많은 양을 차지해 서쪽 연변의 방송을 청취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3. 이념체계의 이중성

하벨(Vaclav Havel)은 후기 전체주의 사회에서 일반 주민들이 외형적으로 공식 이념체계에 동조를 표방하지만 그같은 태도는 社會的 認定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음과 같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 바 있다.

야채가게 주인이 양파와 당근 사이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란 구호를 써붙였다.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것을 통해 세상에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 실제로 그가 전세계 노동자들의 단결을 열망하고 있는 것일까? 너무 열광한 나머지 자신의 이상을 다른 이에게 알릴 수밖에 없는 욕구를 느낀 것일까? 어떤 식으로 노동자들의 연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 그것이 무엇을 뜻하게 될지 잠시라도 생각해 보았을까?

...

야채가게 주인은 그 구호의 내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가 진열장에 구호를 내건 이유는 거기에 나타난 어떤 이상이나 생각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렇다고 그의 행동에 아무런 동기나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며 그 구호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도 아니다. 그 구호는 하나의 신호이며 비록 숨겨져 있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나 야채가게 주인 아무개는 여기 있으며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나는 [체제가] 내게 바라는 것을 행한다. 나를 믿어도 좋다. 나는 비난받을 이유가 없으며, 나는 복종한다. 그러므로 나는 말썽없는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²⁵⁾

이 비유는 사회주의체제에서 주민들의 意識의 二重性²⁶⁾을 묘사한 것으로서, 북한에서 주체사상이라는 공식 이념체제의 수용 정도 또는 그것의 內面化 정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주체사상의 내면화 정도는 경험적으로 관찰하기 힘들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해 간접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내면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의 하나로서 지도부의 주체사상 교양의 방법에 대한 언급을 들 수 있다. 金正日은 주체사상 교양에 있어서 기계적 학습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일부 일군들은 학습회나 강연회를 몇 번하였는가 하는 통계나 받고 문구를 따로외우기 위한 경쟁 같은 것이나 조직하면 혁명관을 세우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답식 학습경연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론쟁하면서 집체적 지혜를 동원하여 문제의 본질을 폭넓고 깊이있게 리해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구를 기계적으로 따로 외우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²⁷⁾고 말하면서 주입식 방법에 의구심을

25) Vaclav Havel, “The Power of the Powerless,” in Vaclav Havel, et al., *The Power of the Powerless* (New York: M. E. Sharpe, 1992), pp. 27~8.

26) 이것은 마치 공적 선호와 사적 선호의 상이성을 논한 쿠란(Timur Kuran)의 선호의 왜곡(preference falsification)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Now out of Never: The Element of Surprises in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of 1989,” *World Politics*, vol. 44, no. 1 (October 1991), pp. 7~48; _____, “The Inevitability of Future Revolutionary Surpris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0, no. 6 (May 1995), pp. 1528~51 참조.

27) 김정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당 중앙위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7.10.10),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평

표명하였다.

또 다른 평가의 기준으로서 귀순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다양한 체계 구성요소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도 혹은 관점을 들 수 있다.²⁸⁾

첫째는 최고 지도자인 金日成과 金正日에 대한 지지도이다. 김일성에 대해서는 작게는 60~70% 그리고 많게는 99%의 북한 주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반면, 김정일에 대해서는 40~50% 정도만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식 이념체계인 주체사상에서 논의되는 수령관과 관련하여, 이같은 지지도의 差異는 주민들이 김정일을 최고 지도자로 인식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사회주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인 集團主義에 대한 지지도이다. 집단주의 원리는 이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인주의가 반사회주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공식적으로 집단주의를 수용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개인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개인주의 의식은 가족의 이익이나 편의를 다른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超道德的 家族主義(amoral familism)²⁹⁾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197~8.

28) 이에 대한 자료는 金炳魯,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4), pp. 81~100 참조.

29) 원래 이것은 가족 이상의 조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그 어떤 신뢰가 결여된 저발전 사회의 멘탈리티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Edward C. Banfield, *The Moral Basis of a Backward Society* (New York: Free Press, 1958), pp. 83~101.

경향은 자신의 부모의 의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형제애를 강조하는 반면 타 가족의 연장자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또는 무시하는 태도로 드러난다. 초도덕적 가족주의 성향은 또한 가족이 비밀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단위인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본 조직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는 북한이 표방하는 사회주의 형식으로서의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도이다. 노동당 중심의 지배구조와 자립경제에 대해 북한 주민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체제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중간 관료들의 잘못 때문인 것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념체제에서의 이중성 문제는 동구 사회주의 대변혁 직전처럼 심각한 현상은 아니다. 즉, 동구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개혁정책의 추진과 함께 대변혁 이전 이미 상당한 정도로 손상되어 있었음에 반해, 북한에서는 분단관리체제의 특수성에서 발전한 주체사상이 대체로 북한 주민을 결속하는데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金正日에 대한 낮은 지지도와 集團主義 의식의 약화가 구조적 고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정치, 경제, 이념의 세 가지 하위체계들의 이원화 정도³⁰⁾는 각각 다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두 가

30)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知識·文化體系는 체제의 변화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경우 독특한 지식인 정책에 의하여 그것의 이원화

지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관료들의 일탈행위와 경제체계의 왜곡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하위체계의 이원화는 상호작용하며, 특히 관료일탈과 제2경제 확산 사이의 관계는 더욱 밀접하다. 둘째, 이념체계의 이중성은 전반적으로 크게 확산되어 있지는 않지만, 김정일에 대한 낮은 신뢰와 집단주의 의식의 약화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같은 점들은 심각한 경제난과 함께 현 김정일의 權力承繼 過程에서 정권 또는 체제의 안정을 구조적으로 제약할 뿐만 아니라 김정일로 하여금 개혁·개방으로 집약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선택을 構造的으로 要求한다고 볼 수 있다.

IV. 북한체계의 구조적 문제 (2): 하위체계간 모순

북한이 안고 있는 또 다른 구조적 문제점은 하위체계들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모순 중에서도 경제변화에 뒤따른 주민들의 경제인식과 공식이념 사이의 괴리, 그리고 김정일 권력승계의 정당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우상화와 경제적 보상간의 괴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한 엘리트 갈등의 과정에서 '오랜 인테리'를 대거 숙청하였으며, 1960년대 이후 '인테리의 혁명화·노동계급화' 정책에 의해 유사계급으로서의 지식인을 통제해 왔다. 그 결과 지식 및 문화체계는 철저히 黨의 指導하에 놓이게 되었다.

1. 경제적 변화 對 공식이념의 존속

북한 경제체계의 변화는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공식적 이념체계와 상당한 葛藤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중반의 대내적인 경제정책의 조정과 선택적 개방 그리고 지속적인 생필품 부족현상에 따라 관료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암시장이 확산되었다.

주목할 것은 이같은 경제적 측면의 변화가 주민들의 경제인식 변화로 발전하여 공식 이념과 모순을 빚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그러하다. 종전에는 주민들의 주요한 가치가 돈보다는 사회적 상승, 구체적으로는 당원이 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돈을 가져도 상점에서 구입할 상품이 없었던 반면, 당원이 되면 여러 가지의 배급혜택과 권위가 동시에 주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도 그러한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것으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암시장이 확대되면서 돈이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으며 특히 外貨는 절대적인 가치와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외화는 가장 중요한 뇌물 수단인 동시에 어떠한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북한에서 외화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 후반, 즉 대외경제사업의 확대·발전에 박차를 가한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이 한창 진행되던 때부터 급속히 증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³¹⁾

31) 이정희, “시베리아 벌목장 실태,” 김근태 엮음, 「안경없는 군대 이야기: 공개되지 않은 인민군 쫓병생활」 (서울: 의암출판, 1993), pp. 243~7.

이같이 경제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인식의 변화는 물질적 요새 및 사상적 요새의 동시 점령이라는 이름 아래 체제발전의 추동적 역할을 행한 주체사상과 갈등을 낳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집단주의 원리의 약화와 함께 현 이념체계의 수정을 요구하는 構造的 動因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상징조작 對 경제적 보상의 결여

김정일의 공식승계를 위해 현재 북한이 행하는 이념적 측면에서의 象徵造作은 타 사회주의체계의 경험과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서, 이는 부자간 승계라는 독특한 북한적 현상이 낳은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은 그의 통치 스타일을 ‘인덕정치’ 혹은 ‘광폭정치’라고 일컫는 동시에, 김정일을 김일성과 동일시 하면서 카리스마의 轉移를 피하고 있다. 물론 북한은 이같은 상징조작과 함께 북·미 핵협상 타결과 북·일수교 추진을 통한 經濟協力을 목표로 삼으면서 이념적 조작과 김정일 정권의 수행능력 사이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념적 상징조작과 경제적 보상 사이의 괴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북한이 택하고 있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한 국지적 개방정책이 그것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構造的 先在要件, 즉 정치체제내 권위구조 및 이념체계의 수정, 소유권의 조정, 관료적 통제의 완화 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한적

개방의 효율성은 낮을 것이다. 둘째, 설사 그같은 개방정책이 다소 성공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정치적 산출(output)로서의 정책과 그 결과(outcome)로서 주어질 물질적 혜택 사이에는 時間差(time lag)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징적 조작과 보상간의 괴리는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상에서 지적한 하위체계간의 모순들은 현재와 같은 김정일 정권 및 북한식 사회주의의 원형이 유지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V. 김정일 정권의 과도적 권위구조

이상에서 논한 구조적 모순들은 김정일 권력승계 과정에서 그의 입지를 위축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 구조적 제약이 권력승계 과정에서 김정일의 과도적 권위구조 구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김정일은 아직도 노동당 총비서직과 주석직을 공식 승계하지 않고 있다. 현재 그가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방식은 제3세계의 非常體制(emergency regime)에서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²⁾ 특히 김일성 사후 그가 줄곧 최고사령관 또는 국

32) 물론 비상체제가 제3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民主主義體系에서도 전쟁수행과 같은 정상적인 정치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一時的으로 비상체제를 운용할 수 있다. 아랍권과 긴장관계에 있었던 시

방위원장의 직책을 중심으로 권위를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우선 1994년 11월 9일의 「최고사령관 명령 제51호」에서 最高司令官으로서의 김정일은 자신의 권위가 예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군부와 정무원에 행사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북한방송이 「중대보도」로 발표한 이 명령은 평양시 청류다리 2단계 공사와 금릉 2동굴 건설을 위한 것으로서, 인민무력부에는 작업을 지시하고 정무원에는 자재 및 설비 공급을 지시하였다.

또한 올해 노동당 창건 50주년을 즈음하여 김정일은 國防委員長 명의로 崔光을 인민무력부장에 임명하고 「최고사령관 명령 제 65호」에 의해 3명의 대장과 5명의 상장 승진인사를 단행함으로써,³³⁾ 최고 군사지휘권자로서의 권위를 행사하였다.³⁴⁾ 그리고 기념 열병식 및 군중시위 행사의 주석단에서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겸 최고사령관의 자격으로 신임 인민무력부장의 보고를 받고 열병식을 참관하였다.

이상과 같은 권위행사는 상시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위기관리시의 大權行使인 동시에 超憲法的인 권력행사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고사령관이라는 직책의 사용은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1992년 4월에 개정된 헌법에서는 “국가주석이 전반적 무력

기의 이스라엘이 한 예일 것이다.

33) 「중앙방송」, 1995.10.9.

34) 단, 崔光과 李乙雪에 대한 원수 칭호와 趙明祿, 李夏一, 金永春에 대한 차수 칭호의 수여는 당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무력을 지휘 통솔한다”는 규정이 삭제되고, 대신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제113조)하도록 되어 있어 최고사령관의 권한과 임무에 관한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으며 무력에 대한 통솔도 최고사령관이 아닌 국방위원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김정일이 비상체제에서와 같은 과도기적 권위구조를 창출하여 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첫째, 김정일은 사회주의체제에서 권력승계 제도의 미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軍部の 支持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비상체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체제에는 후계자 선출 과정이 없고 후계자 결정 이후에도 그의 권력을 보장해 주는 장치가 없는 까닭에, 권력승계 과정에서 엘리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것이 장기화되는 경우 군부 개입의 여지가 생기게 된다. 다시 말하면, 승계과정에서 군부의 지지 확보나 군사적 지휘권의 획득은 안정적인 후계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³⁵⁾ 이 점에서 김정일도 군부 지

35) 중국의 경우 鄧小平이 자신의 체제를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고 군사권력의 핵심 직책을 차지하였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당 중앙위 10기 3차 회의(1977.7.16~21)에서 그는 여러 다른 직책과 함께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및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을 차지하여 華國鋒의 지위를 위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결국 華를 축출하고 자신의 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었다. 鄧이 華로부터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접수한 이래 이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보유했던

지확보를 공식승계의 중요한 조건으로 간주하여 당 중심의 지배가 아닌 비상체제하의 권위관계 구축을 통해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이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자 의도하고 있다.

둘째,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후에 나타나는 주민들의 표류하는 민심(free floating obedience)³⁶⁾을 비상체제식의 권위구조를 통해 추스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표류하는 민심은 김일성 사망으로 발생한 카리스마의 공백에서 비롯된 것이다.³⁷⁾ 그러나 이미 논한 것처럼 북한의 구조적 취약점인 김정일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신뢰도 때문에, 그는 軍事的 指揮能力 부각이라는 상징조작(김정일을 '장군'으로 호칭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임)으로 카리스마의 공백을 메우고자 시도하고 있다.

셋째, 김정일이 과도적 성격을 지닌 비상체제의 운용을 통한 '얼굴없는 統治'를 계속함으로써 자신의 업적 부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동시에 대외관계에서 중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할 수 있다. 김일성 사후 북한에서는 '유훈관철'³⁸⁾이라는 이름 아래

공식적인 직책이 되었다. John Gardner, *Chinese Politics and the Succession to Mao* (New York: Holmes & Meier, 1982), p. 125 참조.

36) 이 개념에 대해서는 David Easton,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originally published in 1965), p. 309 참조.

37) 베버(Max Weber)에 의하면, 카리스마란 타인이 소지하지 않은 독특한 권능을 입증함으로써 획득될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카리스마는 쇠퇴한다는 것이다. H. H. Gerth and C. Wright Mills, eds.,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6), pp. 245~50.

38) 북한이 '유훈'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로동신문」 1994.7.19일자에서였다. 김일성의 '유훈'은 대내적으로 단군릉 완공 및 농업·경공

김일성의 노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김정일이 새로운 정책을 직접 제시하는 방식은 취해지지 않고 있다.³⁹⁾ 이것은 대내외적인 실질적 업적의 유무는 김일성의 유산이지 김정일의 리더쉽과는 관계없다는 논리일 수 있다. 또한 김정일이 총비서직과 주석직을 가지게 되는 경우, 대외관계 특히 대미 및 대남관계에 대한 정책적 입장이 자연히 최고 권위당국자인 그에 의해서 표명될 것으로 기대될 것이다.

그러나 비상체제에서와 같은 권위구조의 운용은 기본적으로 過渡期的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김정일의 딜레마이다. 과도기적이어야 할 권위행사 방식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김정일 정권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적 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비상체제식의 권위구조는 단기적으로 유효할 뿐 장기화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오히려 역기능적일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오랫동안 혁명적 수령관 또는 정치사회적 생명체론에 입각해서 수령중심의 권위구조뿐만 아니라 당적 지배를 강조하였다. 비상체제식의 권위구조는 점차 군부의 지지를 넘어서서 軍部에의 依存이라는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업·무역 제일주의의 관철, 대외적으로 대미관계개선을 통한 안보유지, 대남차원에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 기초한 통일달성 등이다.

39) 「로동신문」은 1994년 7월 20일 이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를 줄곧 사용하고 있으며, 1994년 8월 중순부터 김일성의 유훈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자는 쫓기 모임을 꾸준히 보도하고 있다.

둘째, 김정일은 상징조작을 통해 김일성이 지녔던 카리스마를 자신에게 轉移하려고 시도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비상체제의 형식을 빌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커다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⁴⁰⁾

셋째, 김정일은 '유훈관철'을 과도기적 정책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나, 실질적 업적성취를 위해서는 적절치 않은 대응이다.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도 활발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41) 이같은 경제문제의 미해결은 김정일의 이상화 또는 '김일성=김정일'이라는 등식과 모순을 이루는 것으로서, 광범위한 改革·開放 프로그램의 추진과 이를 위한 강력한 체제의 구축을 구조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김정일 정권은 과도적 권위구조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는 공식적인 승계를 통해 정상적인 黨 中心의 權威構造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그의 딜레마가 있다. 대내외적인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새로운 정책을

40) 「로동신문」 1995.10.8일자 정론에서는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는 노동계급의 수령이 서거한 이후 개인미신이라는 간판아래 그의 권위를 헐뜯는 안팎의 원수들의 공격과 배신으로 시작된다... 수령의 권위를 헐뜯고 당과 수령을 인민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반사회주의 책동의 첫째 전략이다.”고 말함으로써 김일성 이상화에 대한 비판 사례가 있었음을 시사하였다.

41) 1995년 9월까지 20여 개국의 130여 대표단이 이 지역을 방문하여 약 100여 건의 계약서, 의향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외국기업과 약 2억 달러의 투자계약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실제 투자금액은 2,00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시하기 위해 그는 정권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지만, 정권의 안정을 위한 군부의 지지 확보는 軍部에의 依存이라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

VI. 결론: 변화 시나리오

이상에서 우리는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안정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변화의 동인)들과 김정일 정권의 과도적 권위구조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절은 이같은 분석을 종합하여 김정일 정권 및 북한체제의 변화를 전망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1. 단기적 측면: 김정일 정권의 유지

김정일은 오랜 기간 동안 승계를 준비하여 왔다. 그는 1970년대 초반 이래 줄곧 권력의 중심인 黨 事業을 주도해 왔고 그것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지도부를 직접 장악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자신의 인맥을 형성해 왔으며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를 통해 지지기반을 확대해 왔다. 또한 엄격히 통제된 통보체계를 통해 모든 정보가 그에게 집중되었다. 따라서 권력의 행사에 대해 김정일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류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표출될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단기적 차원에서 김일성 사후의 김정일 정권은 과도적 권위구조를 활용하여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면서 국지적 개방을 통한 점진적 경제회생을 꾀할 것이다. 물론 구조적 선제요건을 갖추지 않은 개방정책의 성공은 상당히 의문시된다. 그렇다고 위에서 언급한 체제내 구조적 취약점들이 단기간에 위기적인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적으며, 따라서 당분간 그의 정권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 중·장기적 측면: 권위구조의 수정 혹은 체제변동

김정일의 공식승계 지연은 최소한 정치체제 내적인 불안요인으로 잔존하게 될 것이다. 군부의 지지(또는 군부예의 의존)를 바탕으로 한 과도적 권위구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당적 지배에서 벗어난 非正常的인 체제의 작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일성에 대한 예우 때문에 김정일의 공식승계를 미루고 있다는 북한의 공식 입장⁴²⁾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즉, 김정일은 종전과

42) 북한은 김정일이 공식 승계를 지연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평양방송」(김일성혁명력사강좌 162회) 1995.1.15일자를 통해 “그분께서는 최고지도자로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로서 혁명과 건설사업 전반을 영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나 국가 주석으로 추대되시는 일만은 미루어 오십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경애하는 수령님을 그토록 잊지 못해하는 우리 인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이민주천의 사상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인민의 의사를 존중하시며 인민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다바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고 밝혔다. 또한 독일 신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1994.12.14일자는 북한 외교부장 김영남이 김정일의 승계지연 이유는 3年喪 풍습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같은 당적 지배의 권위구조를 회복하고 黨·軍關係 일반원칙을 원상복귀시켜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는 딜레마에 놓이게 된다. 이같은 딜레마가 장기화될 경우, 인민군 최고사령관 혹은 국방위원장으로서 김정일의 공식적 지위에 큰 손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김정일의 정치적 권위가 여과없이 전달되지 않을 여지가 커진다. 달리 말해, 김정일이 軍部와 같은 무력기구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자신이 행사해야 할 權力은 分散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같은 구도는 다음 두 가지의 가능한 상황 중 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일은 정권의 안정을 군부에 의해 보장받는 대가로 정책결정에 있어서 군부의 영향력 확대를 허용하는 수준에서 權威構造를 調整할 가능성이 있다. 곧 김정일을 수위로 한 軍部の 連帶로서, 이 경우 군부는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정책결정(특히 대남정책 부문)에 영향력을 미치는 조정자(moderator) 역할을 행할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당내 군부의 서열을 상승시키는 黨大會의 개최를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김정일은 정권의 안정을 바탕으로 구조적 모순의 극복, 특히 경제적 비효율성 탈피 및 비공식 부문의 양성화를 위한 개혁·개방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구조적 선제요건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개혁·개방을 추진한 것과 같은 효과는 아니지만, 현재 북한이 추진하는 국지적 개방에 의한 것보다는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된다.

군부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주는 이같은 권위구조의 조정은 상대적으로 김정일의 권위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기본적인 가치나 규범이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체제변동은 아니다. 이 변화는 대내적인 구조적 모순을 억제시키거나 점진적으로 완화시키는 정도의 수준에서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둘째, 김정일이 공식승계를 계속 유보하는 상황에서 체제의 구조적 모순이 더욱 심화되고, 결국 김정일 정권의 몰락에 이어 體制變動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불가항력의 사태에 의해 김정일 정권의 상징조작과 물질적 보상 사이에 존재하는 隔差가 두드러지게 될 때 이같은 체제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한 가지 가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주민들의 경제적 불만이 관료들에 대한 자연발생적인 저항으로 나타나고, 부정·부패로 대중적 신뢰를 상실한 관료기구는 이를 통제하지 못한다. 저항은 급기야 구조적 고리 중 취약한 부분인 김정일 개인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며 군부의 진압이 뒤따른다. 여기서 군부는 폭동을 진압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책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정당성을 상실한 김정일을 축출하고 당·정관료와의 연합에 의한 集團指導體制를 형성한다. 이 경우 군부는 직접 정치에 관여하고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후견인(guardian) 내지는 통치자(ruler)로서의 역할을 행하게 된다.

이같은 김정일 정권의 몰락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는 김일성의 유

일적 지배에 의해 특징지워지며 김정일 정권은 이러한 유산 위에 서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정권을 대체하는 집단지도체제는 공식 이념인 주체사상과 수령론을 사실상 폐기하고 개혁·개방의 기치 아래 경제회생을 시도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단절 전략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이 점에서 김정일 정권의 몰락은 정치체제는 물론 이념 및 경제체제의 변화로 이어지는 繼起的인 과정을 거치면서 體制變化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체제변동이 북한체제 전체의 붕괴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체제이든지 내부적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권위적 결정체(체제)가 다시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체제의 총체적 붕괴는 대규모 난민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실체가 북한내 존재하지 않는 상황과 외부의 적극적 개입이 가능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정책 전망

吳承烈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 목 차 >

- I. 序 論
- II. 북한의 經濟難과 構造的 問題點
- III. 북한의 經濟政策 變化와 波及效果
 - 1. 經濟政策 動向
 - 2. 巨視經濟模型에 의한 政策 波及效果 檢證
- IV. 북한의 經濟政策 決定機制와 政策變化 展望
 - 1. 經濟政策 決定機制
 - 2. 政策變化 方向
- V. 結 論

I. 序 論

김정일은 김일성이 맡고 있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국가주석직을 승계하지 않고 있는 바, '유훈통치'를 내세우면서 경제난 해소와 새로운 통치노선 및 권력구조 확립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에 들어 북한경제가 식량 및 생활필수품,

에너지, 생산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더구나 러시아의 체제변혁과 중국의 경제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북한은 더 이상 이들 국가로부터의 지원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형편이며, 김일성의 사망은 북한경제 회복의 무거운 짐이 그대로 김정일체제로 상속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북·미간의 핵협상은 구체적 실행방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으며, 북·일관계 개선과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건설을 위한 외자유치 등 북한의 시급한 현안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북한은 완충기를 설정하고 경공업 및 농업건설을 강조하는 한편, 인센티브체계 개선, 지방행정단위의 경제권 확대 등 정책변화를 시도해 왔으나 성과는 미미했다.

북한에 있어서 경제난 해결과 대외관계 개선은 체제유지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순조로운 정권승계와 정통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김정일 및 기득세력의 권력기반은 현재의 이념 및 정치체제하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바, 체제결함으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의 과감한 개혁·개방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제약요인을 가지고 있다.

금년들어 북한은 체제우월성의 상징으로 활용하던 자립경제건설 노선에 오점을 남기면서도 한국과 중국, 미국 및 일본에 대해 식량지원을 요청해왔다. 한편 북한 水災와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북한이 과장되었다는 의혹을 살 만큼 큰 피해상황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으며, 유엔과 국제적십자사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구호를 요구했다는 점이다.¹⁾

북한당국은 경제위기가 구소련 및 동구권 체제전환과 중국의 시장지향적 개혁 등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과도기적 현상으로 설명해왔으나,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더 이상 국제환경 변화라는 외적 변수를 이용한 책임회피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이번 수재로 인한 피해를 강조함으로써 그동안의 경제정책 실패를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외적으로는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공격적 이미지를 완화함으로써 나진·선봉지역의 외자유치를 도모하고 동정적 국제여론을 조성하며, 국제적 지원을 통해 한계에 이른 경제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정도에 대한 북한당국의 평가가 어느 정도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수재로 인해 1991년 이래 만성적 공급부족 및 지속적 마이너스 성장에 시달려 온 북한경제는 한계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²⁾ 심각한 식량난에 더해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

1) 유엔 水害調査團은 북한방문 결과보고에서 약 10만 명의 이재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며, 피해지역이 전국도의 75%에 달한다는 북한측의 주장이 사실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United Nations, *DPRK Assessment of Damage and Immediate Relief Requirement following Floods* (Depart of Humanitarian Affairs, 1995.9.12) 한편 북한의 관영 중앙통신은 이번 홍수로 모두 68명이 사망하고 520여 만 명이 水災를 당했으며 총 150억 달러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도했다(1995.9.6). 또한 북한 적십자사는 1995년 9월 4일 제네바의 국제적십자연맹 본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번 水害로 인해 33만 1천 헥타르의 경작지가 침수되었으며 전체 곡물피해량이 190만 톤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2) 한국은행이 추계한 북한의 국민총생산 추정치에 의하면, 북한의 국민총생산(GNP) 성장률은 1990: -3.7%, 1991: -5.2%, 1992: -7.6%, 1993: -4.3%, 1994: -1.7%를 기록하고 있는 바, 경제침체 정도가 한계상황에

해 필요한 장비나 물자의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농업부문의 피해 복구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의심할 바 없이 금년 겨울부터 북한은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속적 경제난과 수재로 인해 체제위기에 봉착한 북한은 경제정책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계에 이른 북한의 경제상황을 기존의 정책수단에 의존하여 개선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북한당국자들도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의 수재로 인한 충격은 새로운 경제정책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왕에 추진해 온 제한된 정책변화의 파급효과 및 북한의 경제정책 결정기제를 분석한 다음,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II. 북한의 經濟難과 構造的 問題點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난은 식량 및 소비재, 생산원자재, 투자재원, 기술력과 인적자원 등 경제제반에 있어서의 不足現狀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누적되어 온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한 것이며, 90년대 국제환경 변화 및 불리한 기상여건으로 인

근접함에 따라 GNP감소폭은 작아졌다. 한국은행, 「북한 GNP 추정결과」, 각년호.

한 농업생산 부진은 산업간 불균형을 가속화시킴으로써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

북한경제의 부족현상 발생원인에 대한 설명으로서 북한당국은 사회주의권 변혁과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국제사회의 긴장고조 등 국제환경의 변화를 들고 있다. 즉, 북한경제의 결핍현상을 外部的 要因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부족현상은 외부환경 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북한경제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장기간 존재해 온 사회주의 吸入形 經濟體制의 보편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³⁾

북한은 1957~1961년 동안 계획되었던 5개년계획의 주요목표를 앞당겨 1960년에 완성했다는 판단하에 1961년에는 제1차 7개년계획에 착수하였으나, 이미 북한경제의 문제점은 5개년계획기간 중에 잉태되고 있었다. 5개년계획의 조기달성은 오로지 사회주의 동맹국가들로부터의 원조와 전시동원체제의 유지를 통해 달성할

3) 헝가리 출신의 경제학자 J. Kornai는 중앙계획형 경제하에서의 수요·공급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구매자 시장(buyer's market) 및 판매자 시장(seller's market)의 개념을 더욱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압력형 경제'(pressure economy)와 '흡입형 경제'(suction economy)로 확대하였다. Kornai에 의하면, 한 경제체제하에서의 수요·공급 상황은 장기간에 걸친 의사결정 과정과 시행과정의 상호작용하에 형성되는 것으로서, 압력형 경제에서는 구매자 시장이 보편적이며, 흡입형 경제에서는 판매자 시장이 보편적인 상황이다. 이와 같은 수요·공급상 상황의 특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Kornai는 생산자가 보유하고 있는 투입재 평균 재고량과 최종생산재 평균 재고량간의 비율을 제시했으나, 북한경제의 통계자료 미비로 인해 이와 같은 간단한 실증분석 역시 불가능하므로 여기서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북한경제에 있어서의 부족현상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J. Kornai, *Anti-Equilibrium*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 1971), p. 226 참조.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주로 주요 부문의 量的 目標 달성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었다. 이미 5개년계획 기간중에 사회주의 동맹국으로부터의 원조는 현격히 감소하였으며, 실행되었던 원조 역시 북한관련부문의 원자재 공급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중화학 공업용 설비 위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북한은 생산 원자재 역시 주로 중국과 구소련으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했기 때문에 동맹국으로부터의 원조감소는 북한의 전산업분야에 심각한 불균형을 조성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1950년대 북한의 農業集團化 역시 인센티브상의 문제점을 노출하기 시작했다. 농업부문의 집단화가 일단락된 직후인 1958년 9월에 이미 대중의 자발적 노동참여를 강조하는 ‘천리마 운동’을 시작한 것은 바로 이를 반영하고 있다. 1960대 초 북한경제가 이미 심각한 부족현상에 봉착하고 있었음은 ‘청산리 방안’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확대노력에서 엿볼 수 있다.⁴⁾ 청산리 방안이나 대안의 사업체계가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당간부가 직접 농민 혹은 근로자와 접촉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생산재를 적시에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농업 및 산업생산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당간부와 노동자의 혁명적 자발성을 함양한다는 것이다.

북한경제의 불균형은 1960년대 군수산업 및 중공업 위주의 경제

4) 김일성은 농업부문과 공업부문의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1960년과 1961년에 각각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제안하였다.

정책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1967~1971년 동안은 북한 자체 발표에 따르더라도 국방비가 전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상회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처했다. 북한은 점차 악화되어가는 산업간의 불균형과 부족현상의 만연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중공업 및 軍需産業部門을 조정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점차 기념비적 산업설비 및 조형물 건축에 재정지출 및 물자공급의 중점을 두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여타부문의 부족현상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와 같은 정책노선을 추구한 결과 북한은 제1차 7개년계획을 3년 연장하여 1970년에야 마무리지을 수 있었으며, 이후에 추진된 6개년계획(1971~76), 제2차 7개년계획(1978~84), 제3차 7개년계획(1987~93) 종료 후에는 각각 1년, 2년, 3년의 조정기를 두었다. 이는 곧 계획기간 동안의 경제정책이 심각한 산업불균형 및 부족현상을 유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공업지향적인 정책의 결과로 특히 소비재부문은 절대적인 부족현상에 시달려 왔으나, 북한은 소비재부문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8월3일인민소비품' 생산운동 등은 지방이나 기업의 내부 유휴자원을 동원하여 소비재 결핍을 보완하려는 소극적 정책이었을 뿐이며, 중앙정부는 결코 소비재부문의 확충을 위해 별도의 재원을 제공하거나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⁵⁾

5) 제도적 변화란 생산, 가격, 판매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 분권화와 시장 기구에 의한 소비재의 배분 등 1960년대 이후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

요컨대 북한경제체제는 일찍부터 소비에트형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필연적으로 봉착하게 되는 부족증후를 보여왔으며, 1960년대 중반 이후 그 정도가 점차 악화되어 왔다. 1990년대 이후 첨예하게 대두된 북한경제의 부족현상은 국제환경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공급부족에 의한 것이 아니며, 북한경제 전반에 걸쳐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온 '흡입형 경제'의 제반현상이 가속적으로 악화된 결과이다.⁶⁾ 즉 북한경제의 부족현상은 체제 및 정책특정적 요인들이 필연적으로 초래한 內生的 現狀인 것이다.⁷⁾ 단지 구소련 및 동구권의 체제전환과 중국의 시장지향적 개혁으로 인한 국제환경 변화는 북한경제의 침체를 가속화 시켰을 뿐이다. 북한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볼 수 있었던 개혁지향적 정책채택을 의미한다.

- 6) 북한의 부족현상은 체제이념에 따른 발전전략과 중앙계획경제 운영상 나타나는 비효율성,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에 따른 산업불균형 확대 재생산기제, 대외경제관계의 결함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Seung-Yul Oh, "Shortage in the North Korean Economy: Characteristics, Sources, and Prospects,"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 (Seoul: RINU, 1995), pp. 105~31 참조.
- 7) 물론 1980년대 말 이후 북한경제의 결핍이 가속화된 것은 구소련 및 동구체제의 변혁과 중국의 시장지향적 경제개혁 등 국제환경적 요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할 것이나, 이 역시 북한경제의 체제 및 정책적 특성상 나타나는 적응력부족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식량을 포함한 생활필수품 및 소비재 공급부족

근래에 북한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식량 부족과 생활필수품 등 소비재 부족을 들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은 냉해 등 기후적 요인, 비료·농약 등 농업용 공업제품의 생산 부진, 인센티브체계의 문제점을 포함한 체제운영기제의 결함 등의 원인으로 인해 곡물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⁸⁾

특히 1995년 6월 그동안 접촉 및 대화를 꺼려오던 남한으로부터 15만 톤의 쌀을 무상지원 받는데 동의했으며, 다시 7월과 9월에는 일본으로부터 각각 30만 톤과 20만 톤의 쌀을 지원받기로 한 것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사상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금년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는 수재로 인해 북한 전체 곡물수요량의 절반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⁹⁾

더욱이 1994년도에는 그동안 북한의 주요 곡물수입원이던 중국 동북3성(흑룡강, 길림, 요녕)의 곡물생산량이 열악한 기후조건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20%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8) 북한과 상대적으로 비슷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는 중국 동북3성의 경우 1990~93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곡물생산량이 증가했는데, 이는 북한의 식량난이 단순히 기후조건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9) 북한의 구조적 식량부족량은 연간 200만 톤으로 추정되는 바, 수재로 인해 1995년도 부족량은 전체수요의 약 절반인 350만 톤 이상으로 예상된다.

곡물수입 역시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⁰⁾ 중국측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당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우대해 오던 평양에 대해서도 1995년 5월부터 주민 1인당 곡물배급량을 기존배급량의 절반가량으로 감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식량사정에 더해, 북한경제는 생활필수품을 포함한 공업소비재의 경우에도 절대적인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측이 자체발표한 제3차 7개년계획(1987~93)의 실적을 보더라도 계획기간 동안 전체공업생산 증가목표는 1.9배였으나, 실적은 1.5배로 평가되었으며, 소비재 위주의 지방공업의 경우 계획목표는 2.5배였으나, 실적은 1.7배에 그쳐 소비재의 부족난이 상대적으로 악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소비재 생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합성수지 생산의 경우 당초 계획목표 50만 톤에 비해 실적은 9.2만 톤에 그친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¹¹⁾

북한의 소비재 부족정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로는 암거래

-
- 10) 중국해관통계에 나타난 북한의 1994년도(1~11월) 대중국 곡물(HS code 10)수입량은 1993년도(1~12월)의 9,768만 달러 수준에서 대폭 감소한 2,374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향후 식량자급정책의 일환으로 곡물의 대외수출을 엄격히 제한 할 방침으로 있기 때문에(「중국중앙TV」 보도, 1995.7.12) 이후에도 북한의 대중국 곡물수입량은 크게 증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11) 이와 같은 북한발표 통계치는 당연히 ‘허위보고’(imaginative reporting) 혹은 기업의 실적조작 동기(incentives to doctor plan fulfilment report) [Jan Winiecki, *The Distorted World of Soviet-Type Economies*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88)] 등에 의해 실제상황보다 과장되었을 것이나, 관찰대상의 상대적인 상황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용되었다.

행위의 만연을 들 수 있다. 공식적 상업망을 통한 소비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은 암거래를 통해 생필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暗市場의 인플레이션 현상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암거래 증가에 따라 화폐유통속도 및 잉여화폐(monetary overhang)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물자부족현상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은닉성 통화팽창(hidden inflation)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1992년 3월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평균임금을 43.4% 인상했으며, 1992년 7월 기존화폐를 새화폐와 1:1로 교환했으나, 전반적인 부족현상의 악화로 인해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¹²⁾ 따라서 불법수단을 통해 계획부문의 물자가 암시장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공식적 상업망의 소비재 부족현상은 더욱 악화되는 추세에 놓여있다.

2. 생산원자재 및 중간재와 에너지 공급부족

북한은 식량과 기타 소비재의 부족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생산원자재의 공급 역시 심각한 부족현상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자체 평가한 제3차 7개년계획의 실적을 보더라도 전력, 석탄, 철강, 시멘트, 화학비료 등 에너지 및 주요 생산원자재 부문은 각각 계획목표의 67.6%, 89.3%, 87.5%, 54.5%, 77.7%를

12) 「내외통신」, (주간판 제787호, 1992.3.19; 주간판 제804호, 1992.7.16).

달성한 것으로 발표했을 뿐이다. 물론 이와 같은 북한의 발표치 역시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실제 생산량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최근 전력난의 주요 원인은 에너지 사용의 비효율성, 투자재원부족으로 인한 수력발전시설 및 送配電設備 낙후와 시설확장의 한계성,¹³⁾ 채탄설비 낙후 및 기존탄광의 자원고갈로 인한 화력발전용 석탄의 공급부족 및 원유도입 감소 등으로 설명된다.

14) 제조업 가동률 저하와 석탄 및 시멘트 원료 등 광업부문의 생산량 감소, 그리고 외화부족으로 인한 산업용 원자재 수입량 감소 등은 북한의 공업용 중간재 부족현상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켜왔다.¹⁵⁾

대체로 지역별 자급자족 체제가 갖추어져 있던 중국의 경우, 1975~77년 동안, 에너지 및 운송수단 부족 등으로 인해 제조업 설비의 20~30%가 가동되지 못했다는 보고를 고려해 보면,¹⁶⁾ 북

13) 일반적으로 중앙계획형 사회주의국가의 단위 GDP당 에너지 사용 강도는 시장경제국가의 2.5~3배 정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J. Winiecki, *The Distorted World of Soviet-Type Economies*, p. 7, Table 1.1).

14) 북한의 발전소 건설실적에 관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북한의 발전시설 설비는 대략 수력 66%, 화력 34%로 구성되어 있다.

15) 이와 같은 공업용 중간재 부족현상을 보여주는 예로서는 1987년에 착공된 남포의 '12월 화력발전소'가 착공 7년만인 1994년에야 제1호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었다던가, 북한이 김정일의 치적으로 선전하는 많은 건설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완성이 김정일의 현지도에 의한 물자 및 설비 동원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역설적인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김정일의 현지도에 의해 프로젝트건설이 완성된 예로서는 서해감문공사,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건설, 용성기계연합기업소의 설비개조사업 등을 들 수 있다. 평양출판사 편, 「김정일지도자 제3부」 (평양: 평양출판사, 1994).

한과 같이 원유 및 코크스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對外依存도가 높으며 지역경제 自立도가 낮은 경우, 생산원자재 및 중간재 부족으로 인해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40~50%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최근 수재의 여파 및 에너지 부족과 채탄량 감소의 악순환은 산업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있으며, 오랫동안 가동하지 못했던 생산설비는 이미 재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북한의 산업생산 능력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광물성 연료(원유 및 관련제품, 코크스탄)와 곡물의 수입을 위해서는 북한자체에서도 부족한 철강 및 석탄과 시멘트 등 주요 생산원자재를 수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생산원자재 부족정도가 더욱 심각해져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1992~94년 동안 철강·석탄·시멘트 3품목은 북한의 대중국 수출총액 중 평균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대중국 수입총액 중 원유·코크스탄·곡물은 평균 50%를 상회하고 있다.¹⁷⁾

16) E. J. Perry and C. Wong,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 in Post-Mao China: Causes, Content, and Consequenc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p. 3.

17)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중국해관통계연감 1993」 (북경: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1994); 「해관통계」 (북경: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 각호).

3. 투자재원 부족

북한은 사회간접자본 미비로 인한 병목현상 및 산업간 불균형 해소와 자유경제무역지대 건설을 위한 투자가 시급한 형편이다. 북한경제의 막대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재정과 국내저축, 혹은 수출증대나 외자유치를 통한 재원확보가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 어느 측면도 낙관적이지 못하다.

북한의 정부예산은 침체해 있는 북한 경제규모로 미루어 볼 때, 이미 더 이상 증액이 불가능한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1994년도 한국은행의 북한 GNP 추정치를 근거로 하여 판단한다면, 북한의 中央政府豫算은 이미 GNP의 89%에 이르러, 더 이상 정부재정지출 증대를 통한 투자재원 마련은 힘든 형편이다. 북한의 자체 발표치를 보더라도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1994년 북한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2.4%에 그쳐 재정지출 증가에 의한 투자재원 마련의 한계성을 노정하고 있다.

한편 재정지출 구조의 변화를 통한 투자재원 마련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공업 및 군수산업위주의 산업구조와 산업설비 낙후로 인해 기존의 산업설비 유지 및 보수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뿐더러 軍産複合體를 장악하고 있는 기득 관료층이 획기적인 투자지출 구조 변화에 반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재 공급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투자 建設工期가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정책상의 특징으로 인해 한정된 투자재원마저 투자효율성보다는 정치적으로 선택된 중점항목에 집중투자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체산업의 평균적인 투자재원 부족정도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부재정 확대의 대안으로서 국내저축 증대를 통한 투자재원 확보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북한경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 우선 북한주민은 식량 및 생필품 부족으로 인해 암거래를 통한 구매를 위해 現金保有를 선호하며, 은닉성 통화팽창 정도에 비해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수준이 매우 낮으므로(연리 3~4% 수준) 금융기관에 대한 저축률은 지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¹⁸⁾ 한편 생산단위 역시 높은 생산목표와 가동률을 저하로 인해 재투자를 위한 재원확보가 불가능한 형편이며, 原副資材 부족현상이 극심한 현상에서 재투자보다는 流動性 財源의 확보를 선호하는 형편이다.

이에 더해 북한의 대외무역구조는 대상국이 소수에 집중되어 있고, 아직도 많은 부분이 쌍무적 바터교역 형태에 머물고 있으며, 수출의 대부분이 1차산업제품 및 초보적인 가공을 거친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수출의 供給彈性이 매우 낮다.¹⁹⁾

18) 일반적으로 결핍현상을 보이는 중앙계획형 경제에서는 주민들의 좌절된 소비행위가 강제저축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나, 북한의 경우 식량 등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소비재 역시 암시장을 통해 조달해야 하므로 현금보유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19) 1994년 10대 교역국과의 교역이 북한 총교역액의 84.6%를 차지함으로써, 1993년의 76.4%에 비해 무역집중도가 더욱 높아졌으며, 특히 중국, 일본, 독립국가연합(CIS) 등 3국과의 교역액이 전체의 60%에 달한다. 수출상품 중 광산물 및 비철금속류와 수산물 등 제1차산업제품 및 초보적 수준의 방직제품 비중이 각각 47.1%, 21.4%에 달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4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5).

이와 같은 북한 무역구조의 낙후성은 북한상품의 교역조건을 불리하게 함으로써 수출을 통한 재원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²⁰⁾ 한편 북한은 수출부진과 누적외채에 대한 이자부담 증가로 외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西方債權團에 의한 '채무불이행 선언'이 아직 해제되지 않고 있어서 해외차관에 의한 투자 재원 확보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4. 산업시설 및 기술 수준의 낙후성과 인적자원 부족

북한 주요산업설비의 대부분은 1950~60년 동안 구소련 및 동구와 중국으로부터의 무상지원과 대략 1970년대 초까지 추진되었던 이들 국가로부터의 차관에 의한 것이므로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²¹⁾ 한편 1970년대 초기 이래 북한이 시도했던 서방국가들로부터의 생산설비 도입을 통한 산업설비 현대화계획은 수출부진에 따른 외채상환능력 부족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1984년에는 '합영법'을 제정함으로써 외자유치를 통한 기술 및 선

20) 통일원 및 한국은행에서 추계한 북한의 1991~94년 동안 무역액은 각각 27.2억 달러, 26.6억 달러, 26.4억 달러, 21.1억 달러이다. 통일원,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 (서울: 통일원, 각년판); 한국은행, 「북한 GNP 추정결과」 (서울: 한국은행, 각년호).

21) 통일원의 추계에 의하면, 1950~60년 동안 북한은 구소련 및 동구와 중국으로부터 약 12억 7,80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를, 1950~75년 동안 이들 국가와 OECD국가들로부터 약 28억 5,700만 달러 상당의 차관을 제공받았으며, 이중 대부분이 산업설비제공을 통해 이루어졌다. 1975년 이후의 무상원조 및 차관은 소규모에 그쳤다. 국토통일원, 「북한경제 통계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6).

진설비 흡수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이 또한 별다른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²⁾ 또한 1985년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구소련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산업현대화를 추진했으나, 이와 같은 노력은 구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중단되게 되었다.

북한은 1960년대 이래 추진해 온 ‘자급적 경제’ 건설정책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했으며, 양적 팽창 및 산업영역 확대에 주력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투자를 통한 국제수준의 산업 기술 습득에 실패하였다. 더구나 산업부문의 성장이 주로 양적 목표의 달성을 통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생산단위가 생산기술의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으며, 산업 각 분야에 만연되어 온 결핍현상은 이와 같은 비효율적 성향을 악화시켜 왔다.

한편 북한은 과거 40여 년간 김일성 유일사상,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체제하의 획일적 경제운영, 폐쇄된 경제체제, 시장기구 작용의 배제 등을 기본 정책방향으로 유지해 왔으며, 모든 교육은 이념지향적 행태를 보여왔다. 따라서 북한경제회복을 위한 경제 효율 향상, 국제시장 개척, 선진기술 개발 및 흡수, 工程技術의 발전 등을 담당할 인적자원이 지극히 부족한 상태에 놓여있다. 또한 학술영역도 이념지향적 성향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서 기

22) 1984년 9월~1993년 12월 동안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은 약 140건에 총 1억 5천만 달러 규모로서 그중 90% 이상이 재일조총련계 기업에 의한 합작투자이며, 현재 가동중에 있는 것은 약 70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일원, 「북한의 합영사업추진실태」(서울: 통일원, 1994), p. 8.

술개발 및 흡수를 위한 인적자원 결핍현상이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Ⅲ. 북한의 經濟政策 變化와 波及效果

1. 經濟政策 動向

북한은 근래에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및 대외무역 분권화 등 대외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완충기 동안 우선순위를 농업과 경공업에 두겠다는 대내경제정책 調整方案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당과 각급 행정·경제부서는 물론 군사부문까지도 무역 등 자체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임금인상에 더해 소규모 개인식당 개설을 허용하고 텃밭 개간을 장려하는 등 유휴자원 활용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당조직 선전선동부를 통해 시·군단위의 경제선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시의 식량난 해소와 농촌의 노동력 보충을 위해 도시지역 주민의 농촌이주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투자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의 대규모 건설 사업을 중단하고 동원가능한 투자재원을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인프라 건설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³⁾

23) 1995년 7월 현재 나진·선봉지역 건설실태는 다음과 같다: 국내지역과 나진·선봉지역을 구분하는 약 90km의 울타리 공사 완료; 나진-원정간의 광섬유케이블 공사 완료 및 중국측 통신망과의 연결; 남양-화송간

농업부문에 있어서 북한은 1994년 이래 협동농장을 군단위의 공업기업소와 결합하여 국영 농업연합기업소로 개편하고 독립채산제를 강조함으로써, 농업용 공업원자재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했으나, 산업가동을 저하와 무리한 국영소유제의 추진으로 인해 농민의 근로의욕이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대외경제부문에 있어서 1994년도 북한의 對西方交易은 총 교역액의 61%에 이른 반면, 중국 및 구사회주의권과의 교역은 39%로 감소함으로써 처음으로 대서방권 교역비중이 이들 국가와의 교역비중을 상회하였다. 북한의 수출상품구조에 있어서는 최대의 수출품목이던 비철금속 수출이 36% 감소한 반면, 방직용 섬유제품이 최대의 단일 수출품이 되었다.²⁴⁾ 그러나 이는 북한의 비교우위 품목인 노동집약적 방직산업이 발전한 결과라기 보다는 에너지 집약적인 광업 및 중공업 생산의 감소폭이 커서 방직산업의 상대적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²⁵⁾

근래에 북한은 미국 및 독일 등 서방공업선진국과의 경제교류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만 및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증진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²⁶⁾ 그러나 1984년 합영법

철도전기화 공사 거의 완료; 비파관광지 도로공사 거의완료; 나진-원정 및 청진-회령간 도로, 나진항 세관건설, 국제통신센타건설 진행중.

2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4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 현안레포트 95-2호, 1995.8).

25) 1994년도 방직상품의 실제 수출액은 전년대비 1.08% 감소했다. 위의 책, p. 15.

26) 북한은 1995년 3월 독일의 청산구상무역회사(DCCG)와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95년 3월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로 등 2명을 타이베이에 파견 투자설명회를 갖고 대만기

제정 이후 북한이 의지해 온 조총련 계열기업과의 경제협력은 김 일성 사후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4년 2월 이후 금년 9월까지 조총련 기업의 대북투자는 한 건도 없었으며 그 동안 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조총련의 대북한송금규모 역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조총련 내부의 권력투쟁, 김 일성 사후 조총련 기업인의 조직이탈과 실리를 추구하는 분위기, 북한의 투자환경 악화 등에 기인한 것이다.

북한은 극심한 물자부족 및 조총련과의 경제협력 냉각 등 대내·대외적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²⁷⁾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1995년 5월 중국 심천에서의 나진·선봉 투자설명회를 필두로 8월에는 북경에서 위원장 김정우가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나진·선봉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북한은 수출증대를 위해 금년도에 대외경제기관을 재정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에는 정무원 각 부 및 위원회가

업과 협력합의각서에 서명하였고, 1995년 6월 4일~6월 10일 동안 조선국제무역추진위원회 서기장 오태봉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무역실무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여 마그네사이트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 27) 북한은 그 동안 3단계(1992~95년, 1996~2000년, 2001~10년)로 구분하던 나진·선봉지역 개발계획을 당면단계(1992~2000년)와 전망단계(2001~10년)의 2단계로 조정함으로써 개발계획이 순조롭지 못했음을 시인하고 있다. 북한측의 발표에 따르면이라도 1995년 8월까지 나진·선봉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외국기업과 100여 건의 계약서, 의향서, 합의서들을 채택하고, 약 2억 달러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투자금액은 2,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관장해 오던 주요 무역상사들을 국제무역촉진위원회로 편입시키고, 외자유치 및 설비 수출입은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전담하게 함으로써 관리체계를 단순화하고 관련기관의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한편 이론적 측면에서 비록 표면적으로는 최근 발표된 김정일의 논문과 공식간행물에서 부단히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과 무오류성을 강조하고 있으나,²⁸⁾ 이면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시장기구의 접목 및 국제분업체제에의 편입방안 등 개혁방향에 관한 모색과정에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최근의 동북아 경제협력 관련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북한대표의 논문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은 이와 같은 북한내부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²⁹⁾

(생략) 사회주의적인 계획경제와 자본주의적인 시장경제는 서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협력을 실현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제도는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계획적운영을 기본으로 하면서 거기에 시장조절을 배합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경제체제안에서도 계획화와 시장조절을 적절하게 결합

28) 김정일은 최근 관영매체를 통해 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11.1),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1995.6.19),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1995.10.2).

29) 이동근, “세계의 발전추세와 지역의 특성에 맞게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는 것은 21세기 번영하는 동북아세아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중국 심양, 요녕 사회과학원 주최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지역 경제협력과 사회발전’에서 발표, 1995.8.17).

시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동북아시아
나라들이 서로 진심으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정신에
서 분업과 협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한다면 다같이
경제적 번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며 (생략)

그러나 북한지도부는 아직 비교우위 개발 및 시장기구의 활용을
통한 대외교역 확대나 계획과 시장의 결합방법 및 범위에 대해 구
체적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기구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정책 및 선전부문 실무담당자들
의 이념적 경직성과 기득권 보호 동기 등으로 인해 아직 표면화되
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은 1994년부터 3년간의 완충기를 설정하고 농업·경
공업·무역제일주의를 방침으로 정했으나, 투자구조 및 경제운영
체계의 획기적 변화를 시도하기 보다는 기존의 틀 속에서 관리방
법을 개선해왔다. 최근 북한의 정책변화 방향은 ① 임금인상 및
장려금 제도와 경제단위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② 나진·선
봉지역 인프라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의 집중, ③ 수출증대를 위
한 무역 분권화 등 수출 인센티브의 제공 등으로 요약될 수 있
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와 같은 북한의 정책조정이 극심
한 부족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북한의 거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이 바뀔
것인지 혹은 현재의 정책에 머물 것인가는 정책 파급효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침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간단한 북한의 거시경제모형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취해 온 경제정책의 한계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巨視經濟模型에 의한 政策 波及效果 檢證

앞에서 논의된 북한 경제정책의 한계성은 북한경제체제의 대표적 특징을 보여주는 거시경제모형을 작성하고 이를 比較情態分析(comparative statics)을 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검증해 볼 수 있다. 북한 경제정책 파급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포괄적 거시경제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일부 변수간의 상호관계만 고려함으로 인해 범할 수 있는 局地的 분석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³⁰⁾

우선 물자부족현상으로 인한 북한경제의 전반적인 불균형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계획당국이 노동자들의 실질 노동 공급량(N_s)과 중간재 수입량(R)에 의해 공급측면에서 결정되는 북한경제의 총산출량(Y)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³¹⁾

30) 거시경제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부분적(partial) 분석의 맹점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일반적(general)이고 통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1) 국가가 정한 임금수준 및 인센티브 체제하에서 국영기업의 노동수요(N_D)는 계획당국의 계획생산량(P)에 의해 결정되며 [$N_D = N_D(P)$], 자원 부족상태에 놓여있는 북한 기업은 일반적으로 노동동원에 의해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동의

$$Y = Y(N_S, R) \quad Y_N > 0, Y_R > 0 \quad (1)$$

노동자들의 희망 노동공급량(노동시간/년)(N_S)은 계획당국에 의해 결정된 임금을 포함한 인센티브 수준(W)과 절대적 결핍 상황에서 식량 및 생필품 등의 암시장 거래를 위한 화폐초과수요(E_C)에 의해 결정된다.

$$N_S = N(W, E_C) \quad N_W > 0, N_{E_C} > 0 \quad (2)$$

북한경제의 총산출량은 공급측면에서 결정되므로, 주민 실질소비(C_A)는 총산출량에서 계획당국이 결정한 투자(I)와 수출인센티브(e)에 의해 결정되는 수출(X)을 제외한 부분이 된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희망 소비수준(C)은 국정 임금 및 장려금 수준과 암거래를 통한 생필품 조달을 위한 화폐초과수요(E_C)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C_A = Y - I - X(e) \quad X_e > 0 \quad (3)$$

$$C = C(W, E_C) \quad C_W > 0, C_{E_C} < 0 \quad (4)$$

본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북한의 물자부족 현상은 상품시장에 존재하는 초과수요(E_C)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초과수요가 존재하므로, 총산출량은 노동공급량(N_S)에 의해 결정된다.

$$E_G = C + I + X(e) - Y \quad (5)$$

또한 부족현상이 일반적인 북한경제에서 주민들은 암거래 등 여러 통로를 이용하여 생필품을 구입·소비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화폐초과수요(E_C)가 존재하는 바, 이는 화폐유통속도의 역수(k)와 실질소비의 곱에서 계획당국에 의한 화폐공급(M^s)을 감한 것이 된다.

$$E_C = k\{Y - I - X(e)\} - M^s \quad (6)$$

한편 의화로 표시한 북한의 무역수지(B)는 수출인센티브 등에 따라 결정되는 수출에서 계획당국이 결정하는 중간재의 수입량을 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일반적 경향과 북한의 대부분 수입이 원유와 산업원자재 및 곡물 등 중간재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간재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³²⁾

$$B = X(e) - R \quad (7)$$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북한경제의 불균형은 기업운영 및 기업거래에 사용되는 기업 은행예치금에 대한 초과수요(E_D)인 바,

32) 북한의 경우 수입곡물이 노동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계획당국에 의해 현물 배급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중간재로 파악될 수 있다.

이는 총산출량과 국정 임금수준 및 계획에 의한 투자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기업의 예치금 수요(D)에서 계획당국에 의한 기업예치금 공급(S_E)을 감한 것이다. 북한경제가 만성적인 투자자원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에 근거해 볼 때, 기업예치금에 대한 초과수요는 상존한다고 하겠다.

$$E_D = D(Y, W, I) - S_E \quad (8)$$

위에 설명한 거시경제모형을 요약한다면, 북한경제는 노동·상품·화폐·기업예치금·외환의 다섯부문으로 이루어지며,³³⁾ 이들 각 부문은 만성적인 초과수요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위의 모형에서는 북한의 현실에 비추어 국정 固定價格을 상정하고 있으며,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가격수준은 1로 가정하였다. 이와 같이 설정한 북한 거시경제모형의 比較情態分析 結果를 도출하기 위해 (1)~(8)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4부문의 수요·공급 균형상태를 설정할 수 있다. 위의 모형에서는 5부문을 상정하고 있으나, 왈라스 법칙(Walras's Law)에 의하면 5부문의 초과수요 합은 0이 되어야 하므로 북한경제모형의 비교정태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나머지 4부문의 解를 구하면 되는 것이다.

33)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일반적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기업운영자금(예치금) 공급과 일반화폐의 공급은 구분된다.

$$F_1 = N_D - N(W, E_C) = 0 \quad (9)$$

$$F_2 = C(W, E_C) + I - Y(N_S, R) - E_G = 0 \quad (10)$$

$$F_3 = k \cdot \{Y(N_S, R) - I - X(e)\} - M^s - E_C = 0 \quad (11)$$

$$F_4 = R - X(e) + B = 0 \quad (12)$$

(9)~(12)가 나타내는 노동, 상품, 화폐, 외화 등 4부문의 관계식에서 계획당국의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外生變數는 노동수요(N), 노동 인센티브(W), 투자(I), 중간재 수입(R), 수출 인센티브(e), 화폐공급(M^s) 등이며, 거시경제모형에 의해 결정되는 内生變數는 노동공급(N_S), 상품초과수요(E_G), 화폐초과수요(E_C), 무역수지(B) 등이다.

크레이머 법칙(Cramer's rule)을 사용하여 4부문의 균형상태 관계식 (9)~(12)로부터 외생변수(Z) 변화에 따른 내생변수의 변화 방향을 알기 위해 比較情態分析의 解를 구해보면 <표-1>와 같다.³⁴⁾

분석 결과,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이 근래에 추진하는 체제들 속에서의 노동인센티브 개선이나 무역분권화 등 수출촉진정책, 그리고 나진·선봉지역 인프라 건설을 비롯한 중점사업에 대한 투자 증가가 다같이 부족현상이나 국민총생산 감소 추

34) <표-1>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거시모형의 안정성(stability) 보장을 위한 조건 ($kY_N N_{E_C} < 1$) 등 몇 가지 변수 반응의 상대적 크기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며, 북한경제는 대체로 이들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별도의 언급없이 이들 가정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크레이머 법칙의 적용방법은 <附錄> 참조.

세를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표-1> 북한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방향

Z : 정책변수	dN/dZ	dE _G /dZ	dE _C /dZ	dB/dZ	dY/dZ
W	+	+/-	+	0	+
e	-	+	-	+	-
I	-	+	-	0	-
R	+	-	+	-	+
M ^s	-	+	-	0	-

임금인상 등 노동인센티브 제공은 상품초과수요를 악화 혹은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특성상 임금격차를 조장하는 장려금 제도의 확대는 한계가 있으며, 일반적인 노동인센티브는 1992년 3월의 경우와 같이 일률적인 임금인상 형태를 취한다고 볼 때, 이는 희망 소비규모를 증대시킴으로써 상품부족 현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미미한 총산출 증가효과가 있을 뿐이다.

근래에 북한은 근로자와 농민, 그리고 개별 경제단위의 적극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인센티브체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나, 심각한 소비재 공급부족, 국정가격과 암시장가격의 편차,³⁵⁾ 사상적 경직성에 따른 한계성 등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의 지속적 침체는 개인의 근로의욕은 물론 경제단위의 적극성을 감퇴시키고 있다. 특히 부족현상의 심화에 따라 경제계획이 집행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및 부서간의 利己的 傾向이 가중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의 물자 부족현상은 체제결함에 기인하는 바, 이의 근본적 개선을 추진하지 않는 한 앞의 거시경제모형 분석결과를 통해 보듯이 인센티브체제 개선의 효과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1>에 의하면, 무역분권화 등 수출인센티브 제공정책은 노동공급 의욕을 저하시키고, 총산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수출상품 공급능력이 지극히 낮으며 만성적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산업이 필요로 하는 철강, 시멘트 등 원자재를 수출해야 하므로 주민들의 실질소비 가능 물자를 흡수함으로써 노동의욕을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총산출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또한 계획당국은 원유 및 원

35) 북한의 소비재는 대부분 당국의 배급에 의해 조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규정된 배급량의 10~20%선만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비재의 부족정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암시장의 거래가격을 살펴보면, 국정가격이 1kg당 8천(북한원)인 쌀의 암시세는 23~35원, 국정가격이 한 켈레 14원인 운동화의 암시세는 40~70원, 국정가격이 한 대에 600~840원인 녹음기의 암시세는 5,000~15,000원으로, 각종 상품의 암시세는 국정가격의 3배~50배 수준으로서 북한의 소비재 부족정도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민족통일연구원의 귀순자면담자료).

자재 등 중간재 수입 증가를 통해 총산출을 증가시키고, 상품초과수요의 정도를 약화시킬 수 있으나, 북한의 외화부족현상을 고려해 볼 때, 당분간 이는 시행 불가능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자원의 稀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국정가격과 과도하게 평가된 환율로 인해 북한경제는 比較優位를 실현할 수 없으며, 무역이 무역상사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품개발 혹은 국제시장 수요반영에 있어서 생산단위의 적극성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내부경제가 부족현상의 만연에 의한 판매자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상사와 내부수요자 사이에는 물자 확보를 위한 경쟁관계가 존재한다. 이는 원료공급 및 외화보유 등 측면에서 가시적인 편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 생산단위는 생산원자재를 교환할 수 있는 내부수요자 혹은 암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생산단위에 대한 대외무역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부문에 대한 공적·사적 정치권력의 개입은 무역경로 및 구조를 왜곡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수출상품 공급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비해 수입수요는 매우 강하며, 평가절상된 환율과 암시장의 창궐로 인해 수출입권한에 따른 편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종종 수출입이 무역상사의 결정과 계약대로 수행되지 않고 급작스러운 당 혹은 권력기관의 간여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³⁶⁾

36) 중국의 대북한 무역종사자 면담결과.

결과적으로 체제개혁이 따르지 않은 북한의 무역촉진정책은 자원 낭비 및 배분구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내부경제의 부족현상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구조적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경제에 나진·선봉지역 건설위주의 투자정책은 또 다른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표-1>에서 보듯이, 북한이 제한된 투자재원을 자본회입기간이 긴 '지대'건설에 투입하는 경우 소비부문의 물자에 대한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에 의해 총산출은 감소하고 상품초과수요 정도가 악화되어 거시경제 불균형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다.

나진·선봉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노동력 이주를 위한 주거지 건립³⁷⁾과 수입대체산업기지 및 대규모 경공업 생산시설 건설을 위해서는 대량의 생산재 및 건설재가 수요되며, 나진·선봉의 지리적 입지상 이의 공급은 현재로서는 북한 내부경제가 담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수출시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외화가득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은 투자재원 및 생산재 공급의 이중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생산재 공급차질과 사회간접자본 미비로 인해 건설공기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 경우 북한의 자원부족은 더욱 심화되게 되는 것이다.

37) 나진·선봉지역의 주민 중 노동가능인구는 7만 6,000명에 불과하므로, 본격적으로 지대건설이 추진될 경우, 타 지역으로부터의 대규모 주민이주가 불가피하다. 裴鍾烈, “接境 3國 開發計劃間의 一貫性 分析,” 김익수 편, 「豆滿江地域開發事業(TRADP)에 대한 分野別 評價」(서울: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4), p. 122.

마지막으로 <표-1>에서 화폐공급의 증가는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함을 알 수 있다. 북한당국이 화폐공급 증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꾀하는 경우 현재의 비효율적 인센티브체제와 절대적인 소비재 공급부족 상황에서 이는 곧 암시장으로의 유입자금 증대를 의미하며, 오히려 노동의욕을 감소시킴으로써 총산출 감소와 상품초과수요 증가 및 은닉성 인플레이션의 악화라는 3중적 부작용을 낳게된다. 실질적으로 1992년 3월의 임금인상을 통한 화폐공급 증가는 이와 같은 부작용을 낳았고 북한은 동년 7월 구 화폐를 신화폐와 1:1로 교환함으로써 부작용을 치유하려 했다.

위의 거시경제모형을 통한 분석결과를 아래와 같이 그림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상품부문과 화폐부문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룬 상태를 나타내는 선 CC와 MM을 구해보면 식 (13), (14)로 표시할 수 있다. 이를 노동인센티브(W)와 수출인센티브(e)를 축으로 하는 평면에 그려보면 <그림-1>과 같으며, 이들의 기울기는 각각 (15), (1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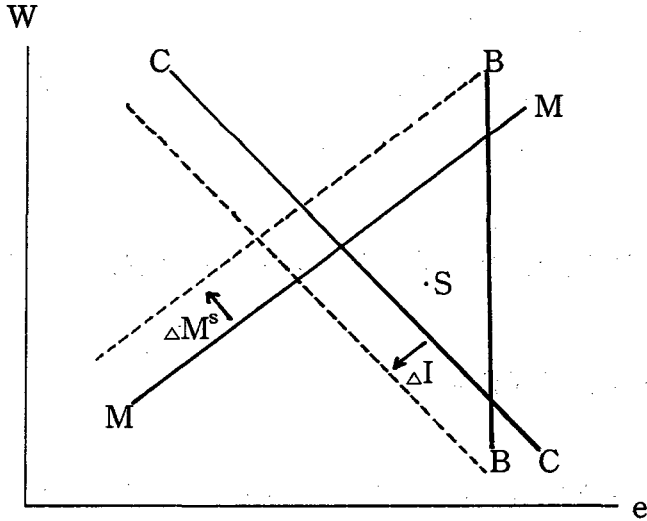
$$E_G = C(W) + I - X(e) - Y\{N(w)\} = 0 : CC \quad (13)$$

$$E_c = k[Y\{N(W)\} - I - X(e)] - M^s = 0 : MM \quad (14)$$

$$dW/de |_{CC} = -X_e / (C_w - Y_N C_w) < 0 \quad (C_w > Y_N C_w \text{ 가정}) \quad (15)$$

$$dW/de |_{MM} = X_e / Y_N N_w > 0 \quad (16)$$

<그림-1> 북한경제의 정책 파급효과



- 註: CC선 아랫부분의 상품초과 수요 < 0
 CC선 윗부분의 상품초과 수요 > 0
 MM선 윗부분의 화폐초과 수요 < 0
 MM선 아랫부분의 화폐초과 수요 > 0
 BB선 좌측의 무역수지 < 0
 BB선 우측의 무역수지 > 0

북한경제가 처한 상황은 <그림-1>의 점 S로 나타낼 수 있는 바, 이는 상품초과수요(물자부족), 생필품 구입을 위한 화폐초과수요, 수출공급 능력 부족으로 인한 무역적자 등 북한의 경제난을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경제정책을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투자증대와 노동인센티브로 정리해 볼 때, 이와 같은 제한적 정책변

화는 <그림-1>에서 CC선을 하향 이동시키고, MM선을 상향 이동시킴으로써 경제불균형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원유 등 중간재 수입 증가를 통해 물자부족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현재의 북한경제 능력으로 볼 때 실현 불가능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IV. 북한의 經濟政策 決定機制와 政策變化 展望

1. 經濟政策 決定機制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변화는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을 위한 체제개혁 노력이라기 보다는 부분적 제도개선을 통한 경제회복 시도이다. 또한 근래에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정책변화는 북한경제구조로 미루어 볼 때, 오히려 거시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수재로 인해 북한은 금년 겨울부터 위기적 경제상황에 봉착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김정일 정권은 이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제정책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향후 북한 경제정책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이 가지고 있는 제약조건과 선택가능한 정책대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역사적 변화과정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정책 노선은 ① 경제계획기구 및 인센티브제

도의 개선과 새로운 경제개발 사업 추진, ② 부분적 시장기제의 도입 및 경제단위의 자율권 신장, ③ 전반적인 시장화 및 생산수단 소유제의 다양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는 김정일 정권이 주어진 정치·사회적 제약조건하에서 경제회생을 위하여 이들 대안 중 어떠한 노선을 선택할 수 있는가에 따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북한 경제정책 변화방향을 결정하는 기제로서, 김정일 및 기득권층의 정치적 입지 및 북한경제의 문제점과 정책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제정책 선택모형을 제시해 볼 수 있다.³⁸⁾

$$F(P, E) = \text{경제정책을 통한 정치·경제적 편익}[G(P, E)] \\ - \text{경제정책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비용}[H(P, E)] \quad (17)$$

여기에서, F(P, E): 경제정책에 대한 정책결정권자의 기대효용

G(P, E): 경제정책의 기대성과

H(P, E): 경제정책의 예상비용

P = {정치적 고려사항: 이념체제에 대한 영향,
정권의 정치적 입지, 외교적 파급효과 등}

E = {경제적 고려사항: 경제현황, 기존정책의 부작용,
신정책의 기대효과 등}

38) 이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는 Seung-Yul Oh,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Is China's Reform Model Relevant to North Korea?" in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Seoul: RINU, 1993), pp. 127~51 참조.

$F > 0$: 새로운 경제정책 채택

$F < 0$: 기존의 경제정책 고수 혹은 다른 대안 선택

위의 모형에서 보듯이 북한의 경제난을 기정사실로 인정할 때, 김정일 정권은 새로운 경제정책이 가져올 정치·경제적 편익이 이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새로운 정책을 채택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거나, 다른 대안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앞부분에서 우리는 북한의 경제난이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한 것이며, 김정일 정권의 정치적 제약요인과 체제개혁 경험부족으로 인해 정책변화 노력은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 머물고 있음을 보았다. 즉 근래에 북한이 채택해 온 정책노선은 앞에서 제시한 3가지 대안 중 ① 경제계획기구 및 인센티브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경제개발 사업 추진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본문의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북한의 제한된 정책변화는 북한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킴으로써 미흡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사회적 비용이 점차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지도층에 의한 앞의 식 (17) 계산결과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할 것이며, 체제유지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향후 북한은 그 동안 취해 온 경제정책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점차 앞에서 설명한 정책대안 중 ① → ② → ③으로 정책노선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정치적 파

급효과에 대한 우려 및 체제유지를 위한 사상통제 등 정치적 고려에 의해 ②에서 ③에 이르는 정책노선 변화과정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북한이 정책변화를 지나치게 지연시키는 경우, 경제난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는 김정일 정권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2. 政策變化 方向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은 북한경제의 회복에 공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자부족현상 및 은닉성 인플레이션 악화 등 거시경제의 불균형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측되며, 북한경제의 총산출 역시 침체상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나진·선봉지역의 건설계획 역시 동 지역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중국 및 러시아와의 이익상충,³⁹⁾ 시장확보의 어려움, 북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등 요인으로 인해 성공적인 외자유치가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당국은 경제난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나, 김정일 정권의 정치적 부담과 이념적 경직성, 그리고 기득권층의 반발 등의 제약조건하에서 급격한 정책노선 변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39) 두만강지역 개발계획과 관련, 중국은 자국영내의 훈춘지역,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 중심의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접경국가간에 이익이 상충되고 있으며, 북한·중국·러시아간의 인프라 연결을 위한 재원 마련 역시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은 금년 겨울부터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앞에서 논의된 3가지 정책노선 중 점차 현재의 ① 경제계획기구 및 인센티브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경제개발 사업 추진 노선으로부터 ② 부분적 시장기제의 도입 및 경제단위의 자율권 신장 단계로의 노선전환을 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부분적으로 市場機構 도입을 통해 경제운영체계 개선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세습체제의 한계성과 기득 관료 및 軍部の 반발로 인해 정책변화는 좁은 영역에서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과정은 개혁초기부터 공개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을 표방·선전해 온 중국의 경우와 판이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⁴⁰⁾

市場機構의 적용범위 역시 당분간은 근래에 북한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있는 암거래 행위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암거래의 제도권 흡수를 위해 북한당국은 시장가격에 의한 일부 공업소비재의 거래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환율 및 임금, 생산재 가격을 포함한 전반적 가격기구의 개선이나, 기업경영자율권 보장, 소유제도의 다양화 등 본격적인 체제개혁은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당국은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외자 및 기술 유치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외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40) 중국의 시장지향적 개혁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오승렬, “중국 경제개혁과 시장기구의 역할,” 「현대중국연구」, 제2집 (서울: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1994), pp. 67~90 참조.

지방 및 각급행정단위에 대한 경제분권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⁴¹⁾ 또한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세분화된 프로젝트 위주의 투자 유치전략을 토지임대형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투자 대상사업 선택의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다. 농업부문에서는 국영 농업연합기업소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농업연합기업소 내에서의 가족단위 책임생산제와 農副產品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농업생산성 제고에 주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김정일 정권은 남북경제관계에 있어서는 남한정부를 배제하고 개별기업, 특히 대기업과의 접촉을 통해 선별적으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함과 동시에 西方資本 유치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난이 심화되고 외화획득원이라는 측면에서 북한경제의 대남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⁴²⁾ 민간차원의 경제교류 협의창구를 개설하고 이를 통한 남북경협관련 협의를 제안하는 경우 북한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41) 특히 대외무역, 투자재원 및 생산원자재 조달 측면에서의 분권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42) 1994년 남한은 중국, 일본에 이어 북한의 제3대 교역대상이며, 특히 남북교역의 대부분이 남한의 반입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에 북한의 수출총액 중 남한의 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이른다.

V. 結 論

근래에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북한 경제난은 체제 및 경제정책의 상호 작용하에 구조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누적·심화되어 온 결과이며,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소비재 및 생산재의 만성적 부족, 투자자원 부족과 기술력 및 인적자원 부족 등이 있다.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악화시켜 온 체제 및 정책적 요인으로는 사상적 偏向性에 의한 자급경제체제 구축 노선, 사회주의 계획경제 운영체제의 결함, 부족현상의 확대재생산 기제, 대외경제관계의 비효율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북한경제체제의 본질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북한은 기존체제 틀 속에서 계획기제 및 인센티브체제의 개선, 무역권 등 경제권한의 分權化,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건설 등 제한적인 정책변화를 통해 경제난 완화를 시도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 지도자들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본틀을 깨지 않고서도,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 및 부분적인 제도 개선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난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하에 시간을 낭비해 온 것이다. 제한적인 정책변화의 결과에 대한 북한 지도층의 지나친 낙관적 기대는 체제개혁 경험 결여, 세습체제하에서의 기득권 탐닉에 기인한 것으로서 북한체제의 개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경제체제의 근본적 개혁이 따르지 않

는 한,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오히려 거시경제적 不均衡을 심화시킴으로써 경제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의 타당성은 1990년 이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와 농업·경공업·무역 제일주의의 천명 등, 북한의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경제상황에 의해 실증되고 있다.

금년 여름의 수재로 인한 충격 및 금년 겨울부터 한계에 봉착할 북한경제의 위기적 상황은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과거에 비해 전향적인 정책 채택 시기를 앞당기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난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하에서 김정일 정권은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점진적이거나 개혁지향적 노선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정일 정권의 정책적 딜레마와⁴³⁾ 경제난 원인 분석상의 오류, 체제개혁 경험부족에서 오는 代案不在 및 정책효과에 대한 낙관적 기대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과감한 체제개혁 정책을 채택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분적인 市場機構 도입을 시도할 것이나, 이 역시 지극히 좁은 영역으로 한정될 것이며, 북한이 본

43) 김정일 정권의 정책적 딜레마란 경제회복을 통한 권력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선택이 필요한 반면, 세습체제 유지와 사회통제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시도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가리킨다. 중국의 경우, 모택동에 의해 지명된 화국봉체제는 이와 유사한 정책적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결국 등소평체제에 의해 대체되었다.

격적인 개혁·개방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행착오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상황이 악화될수록 부분적 제도개선 정책의 限界效用 역시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북한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하에서 설사 어느 정도 전향적인 경제정책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경제난이 쉽사리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누적되어온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주민의 비효율적 경제행위 패턴은 단순히 정책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남북경제관계와 관련, 본 연구의 김정일 정권 경제정책 전망으로 미루어 보아, 남한의 무조건적 경제지원 및 경제교류 확대가 북한의 변화를 자연적으로 유도할 것이라는 전제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지도층의 체제개혁 의지가 표면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차원의 대북경제지원은 북한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一回性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남한기업에 대한 접근 방식이 반드시 경제적 효율성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운용체계의 비효율성을 감안할 때, 통일비용 축소를 목적으로 하는 조급한 남북경협 방안 역시 아직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로서는 위탁가공교역을 포함한 기존의 남북교역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형·무형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낮출 수 있는 남북교역의 제도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금후에는 단편적인 대북지원방안 제시보다는 상호간 실리도모 차원에서의 단계적·포괄적 남북경협 제도화 및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 북한의 합의

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 지도층이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개혁에 의한 경제적 편익의 추구가 체제생존을 위해서라도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을 갖고 개혁정책을 가시화하는 경우, 비로소 남북경협의 확대는 북한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족공동 번영 추구라는 목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附錄>

예를 들면, 노동인센티브 W의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N의 변화 방향은 크레이머 법칙(Cramer's rule)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4부문 초과수요 관계식의 자코비안 행렬식(Jacobian determinant):

$$J = \begin{vmatrix} \partial F1/\partial N & \cdots & \partial F1/\partial B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cdot \\ \partial F4/\partial N & \cdots & \partial F4/\partial B \end{vmatrix} = \begin{vmatrix} 1 & 0 & -NEc & 0 \\ -YN & -1 & CEc & 0 \\ kYN & 0 & -1 & 0 \\ 0 & 0 & 0 & 1 \end{vmatrix} = 1 - kY_N N_{Ec} > 0$$

우선 벡터(vector) Fw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식 (9)~(12)를 이용하여 W의 변화에 따른 부문별 반응을 구한다.

$$F_w = \begin{bmatrix} \partial F1/\partial W \\ \partial F4/\partial W \end{bmatrix} = \begin{bmatrix} N \\ -C \\ 0 \\ 0 \end{bmatrix}$$

이 결과를 자코비안 행렬식의 제1열에 대입한 후(|J_{Nw}|) 解를 구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는 곧 경제이론에 의한 노동공급 변화 방향과 일치하는 계산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dN/dW = |J_{Nw}|/|J| = N/J > 0$$

II. 綜合討論

● 司會: 安秉俊(연세대학교 교수)

● 發表: 梁性喆(경희대학교 교수)

吉成喆(KBS 사회교육국 전문위원)

李相萬(중앙대학교 교수)

俞英九(중앙일보 북한전문기자)

빈 면

綜合討論

司會: 安秉俊(연세대학교 교수)
討論: 梁性喆(경희대학교 교수)
吉成喆(KBS 사회교육국 전문위원)
李相萬(중앙대학교 교수)
兪英九(중앙일보 북한전문기자)

안병준: 우선 두 분의 훌륭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네 분의 선생님께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토론하시는 분은 10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내용은 두 분의 발표에 대한 논평이 위주가 되겠습니다만, 두 발표자께서 제기한 김정일 정권의 변화 전망, 그리고 북한의 경제정책 전망에 대해 토론하시는 분께서 개인적 정보나 의견이 있으시면 첨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양성철 교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양성철: 김성철 박사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붕괴의 개념을 내용과 영역이라는 두 기준으로 보신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내용과 영역을 중심으로 정권, 체제, 체계

의 3차원에서 보셨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여기에 시간 변수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권이라는 차원이 하나 있고, 체제는 아마 북한의 당, 관료체제, 군 등과 같은 제도의 붕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체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견해로는 체제보다는 국가소멸을 생각하는 것이 더 구체적이라고 봅니다.

시간 변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1980년대 말 이후 소련과 동구에서 공산주의가 붕괴하는 과정을 보면 구공산당 지도자는 시간적으로 훨씬 더 빨리 몰락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 지도자로서 김정일 개인의 몰락은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김정일을 둘러싼 권력 엘리트라든지, 정권의 붕괴도 상대적으로 빠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체제의 대체나 변혁은 훨씬 더 많은 시간과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과연 국가의 소멸로까지 이어지겠는가 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점을 생각할 때 체제의 붕괴라는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국가의 소멸을 상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박사께서 '비상체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지금 이상한 상황에 있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버지 김일성이 가지고 있던 국가 기구의 지위나 당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하나도 승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지금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칭호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국방위위원장,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기념일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군부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김 박사께서는 ‘비상체제’라고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準폴란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폴란드에서 자유노조로 인해 공산당 정권의 통치에 문제가 생기자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야루젤스키라는 軍지도자가 당을 대체하고 등장했던 상황, 또는 중국에서의 문화대혁명 당시 당체제가 해이해지자 임포라는 군지도자가 등장했던 것과 같은 일종의 과도기적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폴란드와 같은 과도기적 군통치체제나 중국 문화대혁명 당시 임포의 準軍統治 상황을 상정할 때, 피상적으로는 현 북한 상황과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네 가지 점에서 다르다고 봅니다.

첫째, 야루젤스키의 경우는 폴란드의 軍에서 성장하여 군의 권력기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임포도 군의 권력기반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상정치가 불가능할 때 비상정치를 할 수 있는 군의 실력자였습니다. 과연 김정일은 군의 뿌리를 가진 실력자인가 하는 점이 의문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원수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고, 국방위원장과 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위치는 마치 하늘 위에서 떨어진 것으로서 밑으로부터 뿌리를 박은 튼튼한 권력기반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둘째, 폴란드의 경우나 문화혁명 당시는 폐쇄적인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소요사태가 공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

의 관심사가 되고 뉴스화되었는데 반하여, 북한의 경우는 아직도 비공개적인 비상사태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체제로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의 아들이라는 점입니다. 야루젤스키는 전임 권력자의 아들이 아니고, 임포도 모택동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김정일은 김일성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정치, 경제적인 유산이 결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넷째, 폴란드나 중국과 달리, 물론 중국은 대만이 있습니다만, 북한은 대한민국이라는 상대적인 존재에 대한 분단국가로서의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도 현재의 비상통치에 있어서 또는 군부의 부상에 있어서 마이너스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통치스타일이 괴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 총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장, 수령 칭호, 국가주석, 또 국가주석이 되었을 때 중앙인민위 수위 등 이런 자리들이 모두 공식적으로 비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석가들은 김정일 체제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김정일의 권력장악에는 아직 지장이 없는 것 같다고 거론될 때 흔히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이 등소평과 비슷하다고 비유됩니다. 등소평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아무런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최고통치자라고 여겨집니다. 김정일도 그러한 모습을 답습하는 것 같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네 가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등소평의 경우는 분

명히 실력자였습니다. 당, 군, 정부를 두루 섭렵한 모택동 다음의 제2의 실력자였고, 모택동이 죽었을 때, 순리로 실력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민, 전군, 전당을 장악한 위대한 영도자라고 하는 김정일이 과연 그만한 실력자인가 하는 점이 의문입니다. 둘째, 등소평과 유소기는 공개적인 좌파, 우파의 노선쟁쟁을 벌였기 때문에, 등소평이 등장했을 때 곧바로 새로운 정책노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일이 과연 그러한 상황에 있는가 하는 점이 또 하나의 의문입니다. 넷째, 등소평은 막후 최고실력자로 있으면서 화국붕 체제가 무너진 다음 호요방, 조자양, 현재는 강택민, 이붕 체제를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북한은 1년 4개월이 지난 아직도 공백기에 있으면서 이것을 '유훈정치'로 메우고 있습니다. 이점도 큰 차이입니다.

따라서 북한을 準非常事態 또는 군사과도기로 보아도 문제가 있고, 반면 통치스타일에서 김정일이 등소평을 답습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내용적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김정일 체제는 아직도 세 가지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산주의 체제의 특성으로 볼 때, 무너지기 직전까지는 아주 정상처럼 보입니다. 권력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치 벽돌 하나가 빠지면 썩은 빌딩이 무너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무너질 수 있는 공산주의 특성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상이 없다, 또는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북한체제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 속단은 조심해야 합니다.

북한이 안고 있는 세 가지 딜레마를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상식적이긴 하지만 아주 근본적이기 때문에 강조할 만합니다. 첫째, 북한은 1984년 이후 나름대로 개방·개혁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자본유치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아직도 본질적으로는 폐쇄체제입니다. 폐쇄체제가 자체의 변신이나 변혁 없이 개방체제를 맞이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두만강 개발계획과 나진·선봉계획을 한다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그에 대한 만족스런 해법을 현재의 김정일 과도기 지배체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갈등입니다. 정치논리로 볼 때, 북한은 아직도 미국과의 직접교섭을 통해서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고 이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국가안보에 대한 담보를 받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을 배제하고 일본과 수교해서 벌써 50만 톤의 쌀을 받았습니다. 또한 배상을 요구해서 현재의 경제 난관을 극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경제논리로 볼 때 북한에 가장 쉽고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뿐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단순한 경제적 수지개선 차원으로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인 중에는 북한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이 많고, 민족적 차원에서 경제 외적인 고려를 해서 북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서방 기업들은 과연 경제 외적인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북한

에게는 가장 경제적인 현실론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리 때문에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의 아들이라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경제적, 정치적, 국제적 유산은 김정일에게 모두 부정적입니다. 아버지와 다른 노선을 가더라도 바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따라서 조심스럽게 後金日成 지도체제만이 아니라 後金正日 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도 생각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일 이외의 새로운 지도체제가 집단형이든, 한 실력자가 당이나 군에서 나타나든,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준 부담없이 좀 더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노선변경을 통해 대남접촉도 하고 대미·대일관계 개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봄을 어떻게 넘길 것인지 하는 문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표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북한은 '아시아의 르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이러한 문제가 표면화될 때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병준: 사회자로서 다음 토론하는 분께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난 당창건 기념대회가 당의 행사인데도 인민군이 주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건이고, 또 북한 자체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는데, 지금 김정일이 군에 업혀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반대로 김정일이 군을

장악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둘째는 북한의 식량난이 다소 과장은 되었겠지만, 유엔 당국의 비디오를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식량난이 북한에 있어서 르완다와 같은 난민현상을 일으켜서 정권 붕괴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길성철 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길성철: 김정일 정권의 변화 전망과 북한의 경제정책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를 해주신 김성철, 오승렬 박사의 심층적인 분석에 감명하며, 본인도 이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 정권의 개념문제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김정일 정권의 붕괴는 곧 체제붕괴와 연결된다고 봅니다. 논문에서 의미하는 체제붕괴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실상 김정일 정권의 붕괴는 제도의 붕괴와 동시에 체제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의 붕괴를 학문적, 이론적 측면보다는 형상적인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물론 제2경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주로 군문제에 많이 치중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김정일 정권의 향방에 대해서는 변수가 너무나 많아 그것을 점진다는 것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특히 북한은 예측할 수 없는 집단일 뿐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로

는 풀 수 없는 돌연변이의 집단이란 점 때문입니다. 국가의 통수권이 1년 반이나 공백인 나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마 이를 두고 북한을 특수한 상황의 체제라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런 상태라도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이 북한체제의 또 하나의 분명한 특성이라는 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김정일 정권의 변화전망과 관련해서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현재 김정일의 권력 안정도는 어떠한가. 또 김정일은 왜 공식 권력승계를 하지 않고 있는가. 사실상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김정일 정권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명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일 정권의 권력 안정도는 한 마디로 말해서 튼튼하다고 봅니다. 지금 김정일 권력체제에 도전할 만한 세력은 없습니다.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이 즉각 권력을 승계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치방식에 따른 것이고 봅니다. 김정일이 병이 나서 승계를 못한다느니 족벌 내의 알력이란가 또는 원로나 군부의 견제 때문에 권력승계를 미루고 있다고 내외 여론은 평가했습니다. 물론 김정일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육안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김정일이 증병에 걸렸거나 정치세력간에 알력이 있다면 공식 권력승계를 늦춘다는 자체가 오히려 위협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권력승계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반과 세력을 다지는 편이 권력안정을 위해 시급한 것입니다. 그

런데도 아직 공식 권력승계를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체제유지에 자신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김정일이 1973년에 후계자로 결정되어 20여 년간 권력기반을 닦아 왔다는 사실은 이미 아는 것입니다. 특히 1977, 78년 무렵부터는 사실상 권력의 중심에서 일해 왔습니다. 한때 3대혁명소조의 지나친 횡포로 김일성에 의해 경고를 받아 잠깐 뒷전에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1980년대부터는 다시 당의 핵심에서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모든 정책을 직접 주도해 왔습니다. 3대혁명소조를 통해 1970년대에 이미 북한의 중간간부까지도 김정일 세력으로 교체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 말 군부의 중대장과 대대장, 연대장까지의 중견간부를 젊은 김정일 세력으로 대폭 교체함으로써 하부구조에서 김정일의 기반은 확실히 졌다고 봅니다.

특히 김정일과 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볼 때 주목할 것은 김정일의 세습후계 결정이 군의 최고실력자인 오진우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입니다. 김정일의 세습후계는 1972, 73년 무렵에 사실상 김일성과 오진우를 비롯한 몇 사람에게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오진우는 죽을 때까지 북한의 제2인자의 위치에서 김정일 권력기반을 강화해 옴으로써 군부 내에 김정일에 대한 저항세력이 자랄수 없었습니다.

또한 김정일이 김일성 생전에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군 최고사령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 임명됨으로써 군의 사실상 통치자로 군림해 왔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군원로들에게 차

수와 원수의 칭호를 부여함으로써 혁명 1세대 원로를 예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당창건 50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정일의 군부 우대 조치는 김일성 체제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김정일 저항 세력으로 우선 대두될 수 있는 것이 군부라는 점에서 군부를 달래고 군을 중시하는 메세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창건 50주년 기념대회가 당대회가 아니고 군부대회였다는 사실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북한으로서 당창건 50주년 기념대회의 의미는 상당히 큼니다. 기념대회에서는 분명히 지난 50년간의 역사를 정리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제시하며, 당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상황이 되지 못해서 김정일이 공식 권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군행사로 대처하여 군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하나의 과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을 중시하는 배려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는 군의 권력지배와 직접 연결짓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정일의 성품과 통치 스타일로 볼 때 통치권 누수현상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을 비롯한 黨政 고위간부들도 기득권 유지를 위해 새로운 선택을 주저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구소련의 붕괴나 동구의 변혁을 직접 보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김정일의 공식 권력승계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현재의 내외 사정이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권력 내의 알력보다는 사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사망이 그렇게 빨리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김일성의 급격한 사망에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간 김정일의 세습체제 과정으로 볼 때, 김일성 생존시 북한이 구상했던 권력이동과 구조는 김일성을 주석으로 후건자 지위에 예우하고, 김정일을 총비서로 하여 전권을 행사하도록 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을 개정하면서 주석의 절대적 권위를 사실상 국방위원장이나 다른 자리로 이전시킨 것은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연계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이 죽지 않았다면 해방 50주년, 당창건 50주년이 되는 올해 이같은 권력구도가 이루어졌을지 모릅니다. 늦어도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의 완충기가 끝나는 1997년에 김정일이 당총비서에 올랐을지 모릅니다. 1997년은 김일성의 85회 생일이고 김정일의 55회 생일이기도 하며 김정일이 후계세습으로 등정된지 25년이 지난 해입니다. 특히 그 때까지는 미국이나 일본과의 수교가 거의 마무리되어 북한의 경제도 나아질 전망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를 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갑자기 죽게 되자 권력변동의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이 권좌에 오를 때는 북한 주민들에게 미래를 약속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가시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새로운 경제계획이 확실해지고 새로운 김정일 시대의 개막이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시점,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져서 경제회생의 전망이 확실해지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내년에도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양말, 내의, 또는 국수라도 자유롭게 입고 먹을 수 있게 되면 김정일 체제를 상당히 좋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너무도 어렵게 살기 때문에 조그만 인센티브만 주어져도 상당히 고마워하고, 현 체제를 훌륭하게 느낄 상황에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의 변화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산정권이나 독재권력은 무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김일성 정권도 그랬습니다. 김정일도 정권의 안정을 위해 군을 중시하고 배려했습니다. 특히 군의 절대적 실력자였던 오진우가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누구를 오진우 역으로 대체할 것인가는 김정일로서 고민입니다. 군을 통제할 수 있는 절대 실력자가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김정일이 공식 권력승계를 한다면 군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당주도의 정책을 떠나갈 것입니다. 당에 군부의 실력자를 동용한다 하더라도 외형적으로는 군부보다는 당 주도에 의해서 끌어 갈 것으로 봅니다.

만약 군이 권력에 절대적인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면 그것은 김정일 체제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체제의 변동, 나가서 체제의 변동까지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김정일 체제의 종말은 결국 민족의 통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은 김정일 체제가 당장 무너지기를 바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김정일 체제의 획기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김정일 체제의 향방은 앞으로 2~3년이 고비입니다. 군의 동향보다는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김정일의 권력체제가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항상 변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체제변동에 관련된 주민들의 폭동이나, 가장 믿었던 실력자나 군부의 측근 세력에 의한 정권의 변동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도 김정일 정권의 전망이 불투명해진다고 봅니다.

안병준: 토론이 매우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성철 교수는 북한이 딜레마에 봉착했다고 보는 반면 김성철 박사와 길성철 전문위원은 김정일이 자신감을 갖고서 정권을 잡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해가며 이야기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만: 이 토론에서는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지 않는 이유와 북한의 경제체제가 어느 시점에서 붕괴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북한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을 제시하고, 동구 사회주의에서 제가 느꼈던 체험을 근거로 발표자 두 분의 발표내용을 평가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북한에 대한 오도된 정보를 많이 제시하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오도된 정보를 갖게 된 이유는, 첫째, 주관적인 인식이 강한 점, 즉 우리의 희망적 사고의 틀 속에 넣어서 본 점, 둘째, 북한의 특수성에만 초점을 맞춘 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그 안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관행에 따르는 사람들을 이해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60%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한민족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민족성을 바탕으로 북한을 30%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성 속에서 북한을 90%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10%는 북한의 특이성으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90%를 갖고 북한을 바라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과거에 우리가 북한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 이유는 첫째, 대북정책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점과 둘째, 통일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북정책의 목표는 통일환경의 조성에 두어야 하고, 통일의 목적은 21세기 우리 민족의 생존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등은 통일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동북아경제권 속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합쳐져야 하고, 생존전략적 차원에서 통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북한은 형·동생·친구가 될 수 없으며 생존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통일문제는 남북간 문제보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에게 미국이란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국력격차를 혼동하여 북한체제가 붕괴 직전에 있다고 하는데, GNP를 갖고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GNP보다 중요한 것은 사상적인 단결력과 위기관리능력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과소평가와 우리에게 대한 과대평가 속에서 낙관론이 지배해왔습니다. 북한의 특수성-김정일이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든가-보다도 북한의 보편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주의의 관습과 관행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 속에서 발표자 두 분의 논문을 살펴보면, 김성철 박사는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는 요인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 제2경제의 확산이 아닌 규제확대가 북한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는 말씀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념적 유리성에도 공감입니다. 집단주의를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극단적인 에고이스트들이 남아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주의 현실입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북한사회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시됩니다. 북한정권의 향방이 점진적으로만 진행될 수는 없을 것이며, 루마니아를 보더라도 때로는 빅뱅이론을 적용시켜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오승렬 박사의 관점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일반적으로 거시모형을 사회주의에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점, 둘째, 정보자체가 모호하다는 점, 즉 단위들이 다르다는 점, 셋째, 일관성 문제입니다. 북한의 경우 과거의 관행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일관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제가 보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승렬 박사는 제도 내에서의 점진적인 개선을 주장하셨는데, 체제유지와 경제회복간에 시차가 발생한다면, 즉 체제유지를 위해서 경제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북한 내에서 세력을 얻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경협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관된 견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협을 하는 목적을 알아야 하는데, 남한의 경협은 통일지향적 경협인데 비하여 북한은 체제수호적 경협입니다. 통일지향적 경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현재 북한전체교역의 15%를 남한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협력 중 남한의 비율이 50% 이상된다면 현 상태로 진행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남한 경협의 목적은 사후의존성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50% 이상이 될 때 경협을 통일지향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이 경협의 목적이 됩니다. 상호의존의 심화가 경협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한은 경협을 역할분담해서 해야 합니다. 정부의 통일지향적 경협과 기업의 실리위주의 경협과 민간의 인도주의적 경협을 상황에 맞게끔 조정해야 합니다.

안병준: 이상만 교수께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의 파괴와 동구 사회주의와의 비교사회주의적 시각에서 북한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구 전문기자께서 언론에서 북한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하여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구: 사회자인 안병준 교수께서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나는 김정일과 군부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식량난에 관한 것입니다. 김정일과 군부의 관계에서 관심을 끈 것은 10월 10일 당창건 50주년기념 군사퍼레이드였는데, 이것을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군대는 당의 군대입니다. 국가창건 등의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과거에도 무력시위를 한 바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창건 5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북한은 체제에 가장 위협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방어적인 입장에서는 무력시위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군부에 대한 인사이동을 살펴보면, 인민무력부장의 자리는 오진우 사망 후 최광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진우가 인민무력부장과 총무력부장을 겸임한 것과는 달리 총무력부장 자리는 조명록에게 돌아갔습니다. 인민무력부장 아래에는 제1부부장인 김광진이 있습니다. 총참모장은 김영춘, 열병지휘를 했던 장성우는 3군단장(수도군단장)으로 있는 등 군의 세력포진과 군에 대한 인사내역을 살펴보면, 김정일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는 점과 어느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최고사령관인 김정일이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흔히 군대를 갖다오지 않은 김정일이 어떻게 최고사령관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그러한 질문은 북한군의 생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북한의 군은 정치군대입니다. 군대 내에 정치부문과 작전부문이 따로 존재합니다. 정치부문은 1975년부터 김정일이 장악

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최고사령관인 김정일의 권한은 막강하다고 봅니다. 북한에서는 평소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내의 중앙군사위원회가 최고사령부를 구성합니다. 상설적 기구는 중앙당의 군사부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구표에서는 당군사부가 당의 전체부서의 한 부서로 되어있는데 이는 낚센스입니다. 북한에는 중앙당 안에도 대남부문이 따로 떨어져 있듯이, 군부문은 당군사부가 중앙군사위원회 아래에서 실무부서가 되어 전체 인민무력을 장악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것이 외양으로 나타난 것이 1992년 헌법개정에서 국가주석과 분리되었던 국방위원회입니다. 이같은 구조에서 현재 김정일이 최고사령관으로 있다고 본다면, 김정일이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당군사부장, 인민무력부장, 사회안전부장 등 여러 부서에 수도권 일대나 야전 부문을 포함해서 모두 김정일 계열의 사람들을 포진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결코 군부의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다음은 식량난입니다.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650만 톤이 필요한데 250만 톤 이상이 부족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북한은 북경 3차 쌀회담에서 다른 부분을 양보하지 않음으로써 쌀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버렸습니다. 생존의 마지막 벼랑 끝에 갔다면 그렇게 협상하지 않았으리라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다른 출로가 있다는 판단 혹은 아직 시간이 좀 있다는 판단을 했으리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출로가 있다는 것은 일본으로부터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동남아 특히 태국의 쌀 30만 톤을 구하기 위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내년 3~4월에 식량위기가 닥쳐도, 다른 쪽에서 구할 수 있는 여지와 만약 최악의 경우라도 군량미 부분에 여유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자기측에게 시간이 있다고 판단하는 듯한데, 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남북대화에 백기를 들고 임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철 박사의 발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문제를 특정한 이론들 속에 맞춰본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특정한 이론들 속에 맞추는 것만큼 결합 또한 발생합니다. 이를테면 political authorities, regime, system을 구분하면서 분석을 하지만 북한은 이것이 구분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정권을 장악한 사람이 제도를 만들고 김정일 스스로가 지금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리시켜서 설명할 경우 맞지 않는 점이 나타납니다. 김일성이 사망하면 북한은 개혁·개방을 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이제는 김정일이 사망하면 집단지도체제가 들어서서 개혁·개방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안되니까 한 템포 늦춰서 먼 훗날에 대해서 예측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체제, 체제, 정권은 하나의 운명입니다. 만약 김정일이 무너지면 현재 북한의 나머지 부분이 구성되기 어렵습니다.

제2경제라는 개념도 혼란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북한에서 제2경제 부문을 가르킬때 이는 군수산업부문을 의미합니다. 북한을 설명할 때는 비공식부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분석들에 관해서 김성철 박사는 정치·경제·이데올로기·지식 문

화 등 4개의 하위체계로 나누어 이를 병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고도의 정치사상우선 사회입니다. 하위체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와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부분에 가중치를 더 주어서 분석을 해야 하며, 하위체계를 병렬적으로 취급해서 북한의 시스템이 분석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전반적으로 김성철 박사의 논문 중에서 안타까운 부분은 사회적으로 북한에 암시장이 활성화되고 여행의 자유가 과거보다 나아졌다는가 하는 북한의 변화와 북한에 존재하는 비공식부문을 과대평가해서 북한이 곧 혼란에 빠지는 것으로 이해할 우려를 준다는 점입니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조직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인을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비공식부문, 사회의 유동성 부문이 많이 나타나더라도 사회의 공식부문이 아직 우위에 있습니다. 관료 일탈행위가 후에 주민들의 체제저항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관료일탈행위는 지난 수십년 동안 계속되었던 것이고 1990년대에 들어서도 북한이 지속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더 악화되지도 않고 문제로 남아 있는 것뿐이지, 사회가 불안정 속에 들어서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시나리오에서 단기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단기적이라는 말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여지가 있습니다. 단기간을 2~3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5~10년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만일 2~3년이라고 한다면 김정일 정권을 대상으로 남북대화를 빨리 진행해야 하며, 2~3년 내로 김정일 정권이 위기를 맞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둘러서 남북대

화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신중을 요하며 더욱 상세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학계에서도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속시간을 명시해야 하며, 지표도 감안하여 몇 년 안에 불안정이 올 것이라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시나리오, 즉 '주민들의 경제불만과 이로 인한 저항과 폭동→폭동을 김정일이 막지 못해 군부가 해결함→군부의 권력장악→김정일 축출→집단지도체제 형성→관료흡수→새정권탄생→대남관계 호전→개혁개방'대로 되려면, 주민들이 경제불만 때문에 저항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약간의 배고픔만 면해도 그런대로 견딜 것이라는 견해도 꽤 많습니다. 이런 가설에 대해 설명할 때는 변수를 정밀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승렬 박사의 논문을 살펴보면, 북한 농업개혁의 기본은 집단화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소농형태로 돌아가면 식량수급체제가 무너지고 자급적 경제체제에 이어 체제까지 무너진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농업개혁은 무엇입니까. 평야지대는 집단화시키고, 산간지대는 가능하면 텃밭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승렬 박사께서는 이런 차별성을 두지 않고서 한쪽에서는 집단화를 하지만 한쪽에서는 가족 중심의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북한 개혁에 대한 느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단화를 강화해나가면서 산간지대에만 텃밭을 늘려 자율의지부분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우리의 시각에서는 이를 개혁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수재로 인한 충격 때문에 경제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설명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수재 때문에 경제개혁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금년에 들어와 부분적으로 경제개혁을 실시했습니다만, 6월 이후 7월부터는 아예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수재를 수습해야 하는 사태에 당면해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점으로 설명하신 네 가지 문제점은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족의 경제'라는 의미에서의 북한경제의 취약점입니다. 오히려 북한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은 사상정치우선주의에 따른 빈번한 경제왜곡현상, 개혁경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애를 초래하는 유통문제, 군수산업의 이상비대에 따른 경제전반의 왜곡현상, 에너지 과소비 경제, 경제관리방식 등 다섯 가지입니다.

북한경제를 살펴보면,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외국에 매달려 나진·선봉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자본·기술 등으로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자가 필요하며, 외자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지금부터 1~2년 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 동안 어떻게 체제운명을 할 것인가에 따라, 김정일 정권의 장기화 여부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입니다.

안병준: 감사합니다. 토론자들 모두 일가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토론자가 제기한 부분 가운데, 발표자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방청석에서 두 분 이상의 질문과 논평을 들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오승렬 박사부터 답

변을 하시겠습니까.

오승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 경제의 장래와 관련,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 문제와 군사부분이 상당한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는 점입니다. 서방과의 외교관계 개선이 반드시 경제적 실익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방 경제의 주체는 민간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일본의 관계가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자체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서방측이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군사비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북한이 군사비를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를 경제부분으로 돌리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경제의 문제는 쉽게 말해 밀빠진 독에 물 붓기 격이기 때문에 군수부분의 재원을 일반 민수부분으로 돌린다고 해도 순간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침체양상을 보이는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반도 주위 환경이나 국제관계를 볼 때, 설사 남북관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북한은 절대 군사비를 감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불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북한경제가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만 교수께서는 북한경제의 남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한국경제가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한국 반입액이 북한 총수출액의 21%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간접교역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허가한다고 해서 늘어나고, 허가 안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성격의 경제교류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은 정부의 정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김정일 체제가 경제회생에 정책우선을 둘 때, 북한은 개혁에 과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문제는 북한의 인적 자원 부족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금년 8월에 심양에서 북한 학자들과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논문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북한 학자들의 논문에서 보면, 그들은 시장기구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시장기구와 계획기구를 어떻게 연계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시장기구에 대해서는 원시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본가들에 의한 착취나 선진 제국주의에 의한 착취가 이루어지는 체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과감한 개혁은 당분간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수재가 북한의 개혁을 앞당길 것이냐, 미룰 것이냐는 문제와 관련하여, 수재는 북한의 정책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의 1980년대 초반과 같이 지도자들이 개혁방침을 추진하고 있을 때에는 수재와 같은 충격적인 요소가 생기면 조정기를 갖습니다. 조정기를 가진 후 경제가 회복되면 곧바로 과감한 개혁조치를 채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경제가 바닥에 이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북한은 적당히 쌀지원을 받으면 정책 변화없이 경제가 그대로 굴러가리라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재로 인한 경제충격이 심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재복구를 위해서 모든 자원을 동원할지는 모르지만, 정치비용이 다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년 봄 정도가 되면 오히려 정책변화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물론 개혁·개방과는 거리가 먼 정책변화일 것입니다.

농업부문에 있어서 북한이 국유 농업연합기업소를 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제 논문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북한에는 지금 지역 이기주의, 단위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농업연합소를 통해 군단위로 묶음으로써 해서 공업용 원자재, 즉 비료, 비닐 등을 협동농장이 좀 더 원활하게 공급을 받아서 쓸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재의 경우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텃밭의 비중은 북한 농업에서 상당히 낮습니다. 식량난이 특히 심각한 북한으로서는 이를 돌파하기 위해 명분상으로는 농업연합기업소 국유제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기업소 내부에서는 이제는 가족단위나 약간의 농부산물 거래를 허용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병준: 다음은 김성철 박사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성철: 시간관계상 토론내용을 포괄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북한이나 어느 다른 사회주의 체제를 이해하든 중요한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일이 군권을 장악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장악하지 못해서 군사반란이 일어나고 군사쿠데타에 의해서 김정일 정권이 완전히 몰락할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상당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군부가 개입하는 방식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군사쿠데타에 이르기까지 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군부의 개입정도는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군부가 쿠데타에 의해서 완전히 통치자로서 군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둘째는 하나의 후견인으로서 중요한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뒤에 서서 비토권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제가 마지막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렸던 가정 중에 가능성이 높은 것은 세번째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법적 사고는 북한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위기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안정적인 상황이나는 것으로 구분지어 보는 형식으로도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러한 틀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북한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점차 양적, 질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면밀히 보아야 합니다. 위기 혹은 안정의 이분법적인 측면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들이 아직까지 절박한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점차 그러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변화와 관련하여 저는 개념적인 세 가지 차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요즘 붕괴라는 말이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말하는 것인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가 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총체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모호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구분지어 설명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 수준의 변화의 차원을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양성철 교수께서 체제라는 개념보다 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양 교수님과 제가 동의하는 바는 북한이라고 하는 정치사회적 공동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북한체제의 붕괴라고 보는 점입니다. 양 교수님은 이를 국가의 붕괴라고 보신 것입니다. 내용에서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의 공식 승계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길성철 전문위원께서는 북·미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평화협정을 수립하고, 또는 완충기의 경제적인 업적들을 이룩함으로써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이후에 승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성과가 얼마나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인가에 의문입니다. 설사 북·미관계가 개선되어 수교가 되고, 미국의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것이 물질적 보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차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에서 김정일이 계속 권력승계를 미루고 있다면 그 자체를 붕괴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유영구 기자께서는 군지배가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사 군인사에 있어서 김정일이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하더라도 문제는 왜 군부에 의존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체제 자체가 불안정한 이상 자기의 정권이 온전할 수 없으며, 그렇기에 군부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문화대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처음에는 홍위병들에 의해서 당의 기구가 거의 붕괴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당의 운영이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임표를 중심으로 한 군이 등장하고 군의 영향력이 점점 커졌습니다. 군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권력승계와 관련지어서 임표의 숙청에서 드러난 바와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960년대에 북한에서도 4대군사노선, 경제·국방병진노선, 남한의 군사정권 등장, 쿠바 미사일 위기, 베트남 전쟁 등 여러 가지 동·서냉전의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사부문에 비교적 우위를 두게 됩니다. 그 결과는 김창봉, 허봉학 등의 군부 엘리트의 숙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군부에 의존하는 만큼 군부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기적 측면에서의 시나리오는 저는 2~3년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쌀문제가 변화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유영구 기자께서 지적했듯이 쌀은 직접적인 변화의 요인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두 가지 변화 가능성, 다시 말해 극

단적인 경우로서 체제변동을 설정하고, 그 중간적인 변화로서는 김정일을 위로 한 군부와의 연대를 상징했습니다. 후자는 예전과는 다른 권위구조의 수정을 의미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안병준: 방청석으로부터 두 분의 질문과 논평을 받겠습니다. 질문자는 자기의 이름과 직책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유길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성철 박사의 논문 중, 앞 부분에서 체제, 체제, 정권을 구분하고 북한의 여러 가지 시스템상의 딜레마를 설명하신 후에 시나리오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나리오는 일반적으로 시중의 시나리오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구태여 그런 개념들을 구분했다면, 특히 체제라는 개념을 사용했을 때 뒤의 시나리오를 설득력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의 시나리오와 큰 상관없이 없고 시스템 차원의 분석에 치중했기 때문에 행위자의 역할이 빠져 있습니다. 체제와 체제, 정권을 구분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각 개념들간의 연관성이 설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에 대한 전망을 위해서 이러한 개념들을 구분했다면 좀 더 세밀하게 구분을 해야하고 이의 연관성을 그리고 행위와도 연결지어 설명되어야 합니다.

김정일의 비상체제(emergency regime)라는 개념은 귀납적이지 않고 연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제가 잘못되면 뒤의 설명도 잘

못 될 수 있으니 그 개념은 유보적이어야 합니다.

질문: 저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과도적인 체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군을 장악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과도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북한의 기본적인 권력구조가 군의 권력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이 권력구조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1972년 당조직을 맡을 때 이미 당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그 후에 당 장악 사실을 발표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처럼 먼저 공식발표한 후 직책을 갖고 장악을 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김정일은 이미 1973~74년부터 당을 조직했고 혁명소조를 구성했습니다. 북한 군대의 힘이 결국은 북한 정치군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그들이 회의를 하면 군대가 군을 위해서가 아니라 군이 당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당시 북한의 노동당 규약을 보아도 군이 당의 군이지 군이 정부의 군이거나 혹은 군이 군 자체를 위하지 못합니다. 김정일은 당을 장악하는 순간 군을 장악할 수 있었고 군에 혁명소조를 파견했으며, 또 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군과 당과 각 조직 사노맹 등 모든 것을 장악했으므로, 김정일 정권은 결코 과도정부가 아닙니다. 북한사회에서 군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인민군이 110만, 노농군이 350만, 청소년이 500만이나 되며, 이들이 조직 속에 있습니다. 그 조직 속에 있는 것을 김정일이 25년간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이

과도적이라고 보는 것은 북한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 봅니다.

김성철: 북한에서 김정일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거나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라는 구분 중, 전자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 어떨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권력승계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를 다른 사회주의 체제와 비교하면서 개념의 틀을 추출한 것입니다.

또 행위자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지적한 구조적인 것은 행위자의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입니다. 승계과정에서 주요한 행위자 집단 중의 하나는 군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제라는 개념은 정치사회적 공동체, 북한이라는 전체로서의 실체(entity)를 말합니다. 체제는 체제의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체제, 민주주의 체제, 권위주의 체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제는 존속하면서 체제가 변화되는 경우를 역사상으로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우리 나라가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한 것도 일례입니다.

유영구: 1980년에 있었던 6차 당대회시, 노동당의 정치국 정위원과 후보위원을 합하면 35명 정도 되었는데 그 중 군관련 인사는 8명이었습니다. 이번 10월 10일 행사때 주석단 명단이 42명으로 발표되었는데, 끝의 대표 2명은 우당(사회민주당, 천도교 청우

당)대표이므로 이 들을 빼면 40명입니다. 이들을 살펴보면 노동당 정치국 정위원과 후보위원, 군의 원수·차수, 비서국 비서, 부총리를 포함한 부총리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군인의 수를 세어보면 비슷한 비율이 나옵니다. 북한 주석단의 명단이 북한 권력의 핵심을 이룬다고 본다면, 모든 정책결정이 평소에 노동당 정치국에서 행해지듯이 현재는 그 40명이 정치국 확대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고 군인도 결정에 참여한다고 보지만, 그 결정은 역시 당의 전체 구조하에서 군 최고수뇌가 당의 정책을 같이 토론하고 거기서 통과된 것을 군 차원에서 집행한다고 봅니다. 1980년의 6차 당대회와 15년이 지난 이번을 비교할 때 전체구조면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안병준: 이상으로 제18회 국내학술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훌륭한 논문을 발표해주신 두 분의 발표자와 네 분의 토론자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앉아서 경청해주신 청중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빈 면

會議日程

- 13:30~14:00 登 錄
- 14:00~14:05 開會辭: 李秉龍(민족통일연구원 원장)
- 14:05~15:05 主題發表
 - 司會: 安秉俊(연세대학교 교수)
 - 發表: 金聖哲(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정일 정권의 변화전망”
 - 吳承烈(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북한의 경제정책 전망”
- 15:05~15:20 Coffee Break
- 15:20~17:00 討論: 梁性喆(경희대학교 교수)
吉成喆(KBS 사회교육국 전문위원)
李相萬(중앙대학교 교수)
俞英九(중앙일보 북한전문기자)
- 17:00~18:00 다과회

빈 면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的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的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문화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中心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 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供給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십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일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 協力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과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 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
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 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의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和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廢棄의 意味와 評價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
(1994)

<資 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金正日 政權의 向方

세미나시리즈 95-03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1-4304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5年 11月 日

發行日 1995年 11月 日
